

ISSUE BRIEF 2018

vol.6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학습 × 파트너

CONTENTS

- 1 **협동조합은 평생학습공동체에서 시민성장 한뼘더 학교까지**
손소영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조합원
- 2 **자원봉사, 교과서 없는 평생학습**
곽형모 | 자원봉사이음 실행위원
- 3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교육**
황석연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시민협업팀장

협동조합은 평생학습공동체에서 시민성장 한뼘더 학교까지

손소영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조합원

Ⅰ 협동조합 역사 속에 가치를 갖는 교육

1 초협력자인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온 협동

“이 세상에서 가장 협동을 잘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꿀벌, 개미, 돌고래 등으로 답한다. 제가 협동조합 강의 때마다 인간의 협동 사례를 잔뜩 늘어 놓고 물음을 던지지만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협동을 잘 한다는 분은 지금까지 못 만나 봤다.

‘협동’은 여러 모도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 생존에는 거의 본능과도 같이 필수적인 생존 양식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지역에서나 협동을 체계화하고 사회적인 교감을 발전시키는 활동들로 문명과 문화를 일으켰다. 또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어주는 활력은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경제활동을 가치 활동으로 정의했던 일본 고전경제학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우애의 경제학』 머리말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적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와 같다. 어부는 낚시대나 먹이를 준비해 가지만, 고기는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부와 고기의 내적인 목적 사이에는 일치가 아니라 대립이 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래 서로 같이 움직여야 할 두 가지 부자연스러운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벌어진 틈에 형제애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구원되지 못할 것이다. 불황, 공황, 실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¹⁾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인간문명의 거대 전환 시기에 영국에서 탄생했던 협동의 방식은,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협동, 협동의 목적과 방향이 원대한 사회개혁운동으로 진화했다. 사회개혁이자 협동조합 최초 성공모델은 윤리적 가치에 따라 작은 구멍가게에서 나왔다.

영국에서 보통선거권 쟁취투쟁(차티스트운동)이 일어난 것은 1830년대이지만 실제로 성인 남녀의 보통 평등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928년이다. 그러나 1844년 설립된 노동자들의 생협인 로치데일공정선거자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남녀 구분 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원칙으로 삼았고 이 생협은 이후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표본이 되었고 이들이 확립한 로치데일 원칙은 세계의 모든 협동조합들로 계승되었다.

로치데일은 산업혁명 당시 중요한 면직물 공업도시였지만 1840년대의 불황기에는 노

1) 『우애의 경제학』 가가와 도요히코
지음, 그물코 2009.02.10

동자 6명당 5명은 겨울철에 덮을 모포가 없는 참상이었고, 이런 운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위해 생협을 결성한 28명의 로치데일 노동자들 중에는 차티스트운동가, 사회주의자, 감리교의 금주운동가 등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 협동조합의 창립자들은 조합원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에 대한 중립’이란 원칙도 세웠고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도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협동은 가능하다는 사실은 160년에 걸친 영국협동조합운동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였다.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민주적이며 공평한 사업체가 가능함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로치데일 선구자들의 성공은 복제 가능한 원칙, 보편적인 협동을 체계화한 비즈니스 모델(차별없는 조합원제도와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 이익의 2.5% 적립하여 조합원 교육에 힘쓰기 등)은 20세기에 국제협동조합운동의 원칙으로 정착했고 협동조합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영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기술한 G.D.H. 콜은 로치데일 선구자들의 성공이 ‘기아의 40년대’²⁾로 불리던 매우 혹독한 시기에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나치 독일과 전쟁을 치르던 1940년대를 건디던 시민들에게 보내는 헌사이며, 19세기 협동조합의 성장과 20세기 협동조합의 변화를 시간적으로 다루고 있다. 로치데일 선구자들뿐 아니라 영국 협동조합인들은 성공만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실패, 내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마다 부딪친 난관과 논쟁, 그 가운데서 발견한 새로운 방침과 개혁과 혁신의 노력들이 씨실과 날실로 엮이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를 보면 협동조합이란 ‘종’의 생존방식이었음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의 협동조합 가치에 “조합원들은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서...”라는 문맥이 포함되었는지 깊이 공감하게 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협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서’협동조합을 1)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 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5)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정의한다.

ICA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운동이 경제활동에 민주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믿으며,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경제조직이 공공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다는 철학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모두 이 철학적 기초를 실천에 옮기면서, 자발적·공개적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 7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저는 이 원칙들이 협동조합의 지향인 민주주의, 자치(자율), 참여·협동, 연대,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어서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표방하는 정의, 가치, 원칙에서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두터운 시민사회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조직이다. 2012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인은 특별히 정관에 협동조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 활동,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반드시 넣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동조합의 필수사업으로 공공성을 드러내는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면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시민교육(평생교육)을 위한 작은 학교로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협동의 가치와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사회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교육³⁾,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형식적(non-formal)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교육학 이론 중 구성주의와 생태주의적 관점은 학습자들이 학습생태계 안에서 관계맺음, 상호작용, 경험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배움이라 일컫고 있다. 즉, 학습이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해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학교라는 틀에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환경과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교육의 본질로 본다. 자연스레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이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연대하고 배려하며 상생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의 주요한 골자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사람중심의 인본주의 경제조직으로, 개인 즉 조합원의 성장이 총합 또는 그 이상의 조직 성장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844년 12월 영국의 마을 ‘로치데일’에서 직조공 28명이 1년 동안 모은 약 28파운드의 출자금으로 매장 한 곳을 연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허름한 창고에서 몇 종류의 물품을 진열해 판매했지만, 정확한 물량과 질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 성장

2)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2015), G.D.H. 콜 지음, 정광민 역, 그물코 출판사

3) 『평생교육론』, 차갑부(2014년), 교육과학사
4) 『평생교육행정 및 정책』, 남정걸 외(2000년), 교육과학사

의 바탕은 조합원을 위해 신문을 구독하고 피아노를 사고 도서관을 만들면서 조합원들의 성장과 필요를 사업과 연결해 온 협동조합의 인적인 혁신성에 있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짝을 틔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연대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빈부격차, 실업 등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속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욕구도 같이 해소하기 위해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에 함께 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이 단순히 방법적 원리나 기능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는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협동조합이 공동체의식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협력’의 교육과 공동체로부터 길러지는 개인의 성장

‘관계’와 ‘협력’ 등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는 ‘협력’이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일 뿐 아니라 인간발달에서 필수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간적 가치라는 것이 본래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들의 공동체’속에서 고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인간관으로 볼 때 ‘협력’이 단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필수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라는 비고츠키의 논거는 ‘협력’과 ‘관계’를 명확한 교육적 가치로 보게 한다. 발달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모든 지식과 개념, 기능들은 사회적 협력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기에 협력적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신뢰와 우정’ 등은 사회적 관계와 협력이 없다면 결코 제대로 익힐 수 없다. 이는 인간 발달의 원천이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철학자 듀이 역시 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과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듀이는 산업화·도시화·기계화·노동의 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직접적인 인간관계와 풍부한 의사소통, 자율과 자치, 실제적 활동에의 직접적 참여 등과 같은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가 지녔던 바람직한 생활양식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치의 혼란, 경쟁과 폭력의 증대, 물질주의의 확산, 관료주의화, 공공선의 부재 등과 같은 현상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소산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공동체적 사유 및 행위양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성’은 사회적 협동이나 자유로운 교섭 그리고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의 산물이라 단언한 듀이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민주적인 공동체’이며, ‘인간본성이 가진 능력에 대한 신념, 즉 인간의 지성과 공동의 그리고 협동적인 경험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스스로 사회적 문제들을 설득·협의·토론·의사소통 등과 같은 지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지성적인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유네스코 헌장 선언 속에서 지성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러한 헌장의 정신을 구체화한 인류변영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전 세계 최대 공동목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속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인정한다.

4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유네스코(UNESCO)는 2016년 12월 협동조합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협동조합은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16개 중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도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협동조합에 대해 ‘고용창출부터 도시 활성화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동 이익을 인식하고 조직된 협동조합은 공동체 기반의 실천적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사회 안에서 사회적·생태적 이슈에 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과 혁신에 공헌하는 시민역량이므로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의 주도권을 우선으로 하며 국가의 행위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우위

에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경제적 실체와 사회·문화적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수와 무관하게 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므로 조합의 향후 발전에 관해 공동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이 보장된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에 관한 지식은 한 조합원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에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왔다. 공동의 가치 체계는 협동조합을 작동하게 하는 뿌리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사회적 책임을 배우기 위한 실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대와 정직, 책임과 같은 이상주의적 가치에 다가가고자 하면서 상호부조와 사회적 결속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이어진 조건과 과정들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교육에서 ‘좋은 교육’의 부산물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다른 이를 다루는 방식은 주로 제도를 통해 형성된다. 제도는 일상적인 교류에서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긍정적으로 대우할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기결정력을 드높이기 때문에 절차적 효용이라는 효과를 낳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사회과학 특히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의 방대한 문헌들은 참여가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킨다고 정리하고 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민주제도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느끼고, 일체감과 정체성을 느낀다. 협동조합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를 전제로 절차적 효용성을 극대화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자체가 수행해야 할 일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조합원들이 절차적 효용성을 경험하게 한다. 조합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과정에서 얻는 절차적 효용성은 ‘좋은 교육’의 부산물인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싹틔워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지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고, 스스로 교육하며, 사업의 어려움과 수많은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을 높여가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학습은 우리 일상의 삶과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능력을 능가하는 어떠한 도전에 봉착했을 때, 혹은 새로운 일이나 공동체에 접하게 되었을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류무형 문화유산' 홈페이지 게시 내용 일부 발췌

6) 학교협동조합 발전전략·협동조합은 교육이며, 나라의 미래이다(2017), 한국대학생협연학회

누군가의 언질로 갑작스럽게 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공동체에 깊이 함께하며 소속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이 학습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경험을 화산 폭발에 비유한다면 화산의 폭발은 지각 내 지속적인 운동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부터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참여로서의 학습 현상에 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여기서 참여란 단지 누군가와 함께 어떤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사회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참여행위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한다.⁶⁾

II 시민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1 행동하는 지식 공동체의 재구성과 조직화 ‘협동조합’

시민참여와 성장을 지향하는 혁신과 진보의 흐름에 가장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지식인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인 사회의 협동조합 만들기로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미 창립총회를 열어 출범한 곳도 여럿이고,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염두에 둔 채 연구공동체로 시작한 모임도 있다. ‘지식공동체의 재구성’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지식·인문 운동 성격을 띤다. 이들 공동체는 지식담론 생산의 위기, 대학과 제도의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저항기지의 역할을 추구한다. 동시에 대중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과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로, 지식·인문 협동조합 ‘급진 민주주의 연구모임 데모스’이다. 2008년 1월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박사 과정을 밟던 대학원생이 만든 ‘급진 민주주의 연구모임’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주도한 학습협동조합 ‘사유와 실천의 공동체 가장자리’는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존공생의 삶을 나눈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

‘연구와 삶의 일치와 공존’을 추구하는 ‘인문학 협동조합’은 30대 초·중반 신진세대가 주축인 이곳은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시간강사 80여명에다 전임교수 10여명이 서포터스 역할을 하고 있다.

노나메기재단설립추진위원회는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시민대학’을 열었고, 이형대·조성택·함돈균 등 고려대 교수들이 주축이 된 ‘시민행성’은 실천적 인문공동체를 표방하고 공공성과 시민적 덕성에 기반한 인문·사회·예술·종교·시민 강좌를 연다.

경제 쪽으로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이 이사장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있다. 유 교수는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싱크탱크 기능과 다양한 지식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협동조합·공동체 만들기 의 한편에선 정치 변혁을 도모하는 연구소 창립과 재정비로 이어졌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당 재건을 위한 싱크탱크로, 이사장을 맡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과 네트워크·연대 사업으로 녹색담론을 확산시키고 녹색가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을 표방했다.

이들 지식공동체들의 협동조합 설립은 제도·자본에 저항하는 조직으로의 법인화와 대중과 소통하는 대안조직으로의 선택이었다.

지식·인문 공동체는 일단 대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상황에서 출발했다. ‘인문학협동조합’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임태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현재 학술장은 소수의 정규직과 대

다수 잉여로 구성된 장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불안을 느끼면서 논문 편수를 채근당하는 연구자들에게 삶과 공부는 분리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 분개하고 각성한 이들이 협동조합 출범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는 “무한경쟁과 성과주의에 발목 잡힌 기존 제도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외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식·인문 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식 담론의 위기, 지식·지식인과 대중의 단절과 괴리, 공론·학술장의 부재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자생성·자율성·독창성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이라면 지식 유통이 사업체 형태를 띠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 기존 대안 연구공동체의 모습에 가까운 형편이다.

‘노나메기 시민대학’에 참여 중인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무형의 자원인 지식과 교육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것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 쉽다”며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이기에 조합원들에게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제공할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⁷⁾

2 시민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진보적인가?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진보적인가,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공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구상에 출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 중 하나이다. 좀 더 좁히면 유럽에서 탄생한 근대적인 경제조직

중 하나이다. 길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사업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상인들이 자본에 집중하여 출자관계를 구조화한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가 더 흥미로운 문명의 고안품일지도 모른다. 협동조합은 씨족 사이의 자족, 부족 사이의 교환, 그리고 작은 지역 사회를 벗어나 타자와 결합하여 더 멀리까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체 조직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협동조합 그 자체가 진보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협동조합운동은 진보적이다. 유럽의 도시 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수대와 식수대는 공공선과 그 가치를 사회에 공급하는 점에 주목한다면,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진보라고 본다면, 사회의 생성과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가 선이고 공동선을 해치는 것은 악이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제2부에서 무자비한 산업혁명기의 자본주의를 ‘악마의 멧돌’이란 윌리엄 블레이크의 표현에 비유한 것은 이런 견해와 통한다. 개인에게 유리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공익을 해친다면 그것을 선하고 좋은 행위라고 부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정치학의 목적을 “폴리스의 시민을 일정한 성격을 지닌 인간이 되도록, 즉 좋은 인간, 또 고귀한 행위를 하는 인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진보적으로 되어갔는가? 어떻게 민주적이며 평등한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게 되었는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약하며 때론 타락하고 사업의 능력도 없어보이던 노동자들을 교육하여 윤리적이며 유능한 경영자로,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만들어 갔는가? 협동조합은 어떻게 사업하기에 유리한 주식회사와의 경쟁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세상 전역에 구석구석 존재할까요?

어떻게, 왜? 협동조합은 점점 확장되는 시장경제, 점점 복잡해지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구조에서는 사업하기에 불리한 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협동조합은 지구상에서 10억 명 이상의 조합원과 1억 명 이상의 직원을 둔 경제 주체가 되었을까? 주식회사처럼 사업하기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지만 협동조합에는 그 단점을 보완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협동조합운동은 규칙보다는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둔 운동이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비공식적 학습과 공식적 학습을 결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성공적인 협동조합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협동조합 운동의 르네상스를 뒷받침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비전과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는다.⁸⁾



지식순환협동조합 정기총회
©지순협

7) 경향신문, “지식 공동체의 재구성 ‘협동조합’ 붐, 제도·자본에 저항, 대중과 소통 모색”(2013.7.14.)

8)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7),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발행

3 주식회사를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노동자자주관리기업과 같은 사례를 접하면 주식회사 기업도 충분히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인간의 자발적 노동이 중요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7원칙을 수용하려는 주식회사 기업의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껍데기도 민주적으로 경영되는데 문제가 없고 그것이 가능하며 역으로 영국의 협동조합 은행처럼 협동조합 기업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부패로 실패한 경험을 접할 수 있다.

항상 옳은 소수가 없고 다수의 결정이 나쁜 결정이 아닐 수도 없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민주적 절차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터전 때문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민주주의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효율성을 넘어 민주주의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려는 것은 '항상 옳은 소수'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이 결과의 올바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업은 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기획한다.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하지만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진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논리적으로 다수결이 나쁜 결정에 이를 확률을 0%로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경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생겨나고 발전되어 왔다.

시장경제주의자인 필립코틀러가 본인의 저서인 『필립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①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 ②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 ③ 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④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 ⑤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⑥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 ⑦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 ⑧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 ⑨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 낸다.
- ⑩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 ⑪ 장기적인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한다.
- ⑫ 상품의 품질과 안정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하다.
- ⑬ GDP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⑭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협동조합에 동참시

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 협동조합을 접한 사람들조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고, 단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확산 속도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진행 상황보다 훨씬 느린 상황이다.

4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돕는 문화적 기반

항상 옳은 소수의 존재가 불가능하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역시 불완전하다. 우리는 다수의 결정이 나쁜 결정에 이를 확률이 0%이 될 때까지 끝없이 민주주의에 대해 훈련하고 학습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조직의 차원에서도 서로를 계속 일깨우고 반성하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는 구성원 간 차별을 막기 위해 모두 똑같이 1표씩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나이, 성별, 경력, 연차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혹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기며, 권위가 권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동등한 의사결정권은 동등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조합원도 언제든지 조합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든 조합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질문할 자격이 있다. 또한 납득되지 않거나 문제라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적인 논의 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후 훼손되어버리고 만다.

공론장 만들기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타의 이유로 묵살하면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조직 내에서의 소통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또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착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적 기반은 조합원

들이 모두에 권리에 따른 책임을 문화이다. 협동조합에서는 누구나 조직의 운영에 문제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하고 싶은 사업을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하거나 조합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 규모나 근무일과 시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율권을 가진 만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붙는다.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려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을 올리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의결한다.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결정사항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현실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구체화해간 여정이다. 내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상호부조,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결사로서의 협동조합이었다. 이 협동조합에서 출발하여 외부의 타자에 대해 친절한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개념이 생기고, 최근 ‘우정과 환대’의 구현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개별 협동조합 조직 하나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또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지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직 내부 사람들(조합원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연대를 통해 조직 바깥으로 관계가 넓어지고 외연화 되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이라는 의미의 참모습일 것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시민 참여의 민주주의의 모델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과 공업 생산에서부터 금융, 교육, 문화, 윤리적 소비에 이르는 인간 생활 전반에서 협동조합이 참여하지 않는 업종과 업태는 없다.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이나 협동조합들의 복합체 형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와 ‘자치’, 상호부조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성의 실천 등 민주주의의 실천을 지역사회 구축구석에서 펼치고 있다. 세계 여기저기 또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협동조합 ‘정체성과 가치’는 숨결이 되어 지금도 협동조합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운동이란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고 후세에 전했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는 불리했던 포유류가 멸종할지도 모르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고 우연도 기회로 만들면서 유전자를 통한 종의 보전으로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5 협동조합운동이란 유전자

협동조합운동은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보여 왔다.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에서는 영국 협동조합운동의 한 세기 역사를 기록하여 그 운동의 유전자를 후세

에 전하려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 Union)의 의지에는 비장함과 경의마저 느끼게 된다. 그 임무를 맡은 이는 민주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인 옥스퍼드 대학 교수 D.G.H. 콜(1889~1959)이었다.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원칙에 따르면, “일정 비율의 이익을 교육에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협동조합운동의 핵심원리였다. 이는 특권층에만 국한된 권리였던 시대 속에서는 교육이 삶을 바꾸는 근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계몽과 사회진보의 핵심이고, 혁신적 경영방식은 바로 교육과 학습의 결과였다.

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에 탄생하여 산업혁명의 무자비한 모순과, 20세기의 증오와 분열의 전쟁을 거치고도 계승되고 전파되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21세기 협동조합은 윤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업체로서 쇠퇴한 지역을 살리고 변방에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다.

지난 20세기를 통틀어 한국사회는 자생적 근대화의 좌절과 근대적 시민의식 형성에 실패했다. 오랜 식민지 경험과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이 급속한 산업화·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생산력 중심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은 전통사회의 동질적 지역공동체를 해체시켰고, 사람들은 전통 공동체를 대신할 대안을 찾을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공영역은 형성될 수 없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문제, 식품 오염, 주택문제, 교육 및 시민생활에 대한 시장과 국가 개입의 강화, 건강의 문제 등 국가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억압되었던 ‘생활세계’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십 수 년 가까운 사이에 시민운동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로 각성한 지식인들, 전문가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타율과 수동성의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⁹⁾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의 등장과 성장은 이런 세상에서 시대정신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 한국의 생협운동을 예로 들면, 농약과 화학비료, 각종 첨가물 등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이웃과 함께 생협을 만들어 공동구매와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자와 연대함으로 해결한다. 즉, 식생활이란 개인 영역이 외부에서 주어진 정치와 시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 생협을 대안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생활공동체와 새 공동체 시장을 창조)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런 생협운동의 모습 자체는 타율, 타성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의 훈련 과정이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식이 강한 지식인이나

9) 조혜정,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색: 운동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크리스찬아카데미 주최 <90년대 한국사회와 민간운동의 방향 II> 발제문

10) 정수복, <NGO와 대안문화운동>, 녹색평론, 2000, 1-2월호, 통권50호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들이 생활 그 자체를, 민주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자치의 영역에서 재구성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에서 찾고 있다.

스스로를 살림이스트(salimist)로 부르는 에코페미니스트이자 신학자인 정현경 교수는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전망을 찾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마음의 풍요,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살림’이야말로 새로운 문명과 사회 변혁을 꿈꾸는 세계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 있고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 쏘거나 쇼핑하는’ (Shoot or Shop)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죽음의 문명에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돌보는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전환의 비결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교수는 지금의 세계질서는 사람들의 탐욕(貪)과 분노(瞋)와 어리석음(癡)을 자극해 결국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주주의의 꽃은 ‘열린 마음’이라고 한다.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낯선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한다.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인내’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은 협동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연결한다.

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주의자는 물론 협동운동가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다. 협동하는 마음과 성숙한 민주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칙에 머물지 않는다. 협동조합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생각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 서로에게 든든한 삶의 의지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정교수는 제안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교육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끊임없이 부추긴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 정신은 끊임없는 교육이 없으면 그저 말만으로도 그칠 뿐이다.

또한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리더가 이기심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자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경우 그 조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나가면 얼마 못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들도 물욕과 이기심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다.

6 인격 형성의 그릇이자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원칙 중 ‘자조와 책임’은 협동조합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개인은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배운 기술,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이해,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바탕으로 협동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성숙한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평생교육과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발전을 증진하는 교육의 수행기관이다.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헌신적인 협동조합인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시민으로 이어질 것이다. 능동적인 협동조합인은 다른 시민사회 조직에도 적극적이다. 협동조합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주체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필수적인 이전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협동조합 교육은 조합원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 인간적 품격이 있는 사회와 문화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¹¹⁾



제2회 서울시평생학습대토론회
협동조합세션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다’ 발제자와 패널들과 함께
2017. 9. 21

협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원리가 주권자들이 참여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작동원리를 통해 살펴보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를 통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업체를 만들어 출자금을 모아 주체로 참여하고, 스스로 총회나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직접 운영한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업에 스스로 이용자가 되어 그 사업체의

지속성을 책임진다. 협동조합을 출자, 운영, 이용의 삼위일체의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주권자에게는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에서도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조직 운영 참여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은 과정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직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다. 생협을 예로 들면, 조합원 물품위원회는 조합에서 취급할 생활재 개발, 개선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를 채우려는 적극성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조합 운영의 기본임을 깨닫게 된다. 또 합의된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함께 실행에 옮겨야 조합이 버틸 수 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1인 1표의 의사결정 과정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충분한 인내가 있어야 함을 체감한다. 물품 하나

11)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협동조합7원칙 (2017),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역

취급할지 결정하는데도 오랜 시간 논쟁하는 모습이 소모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보통 느린 의사결정을 협동조합의 약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에 들인 시간만큼 여러 사람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그 결정 물품에 신뢰를 가지고 구매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마치 2인3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처음에는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함께’이지만 신뢰와 소통을 통해 느린 의사결정이 오히려 협동조합에서는 강점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소통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학습한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III 무르익은 협동조합, 이렇게 할 수도 있다

1 기계 부품같이 역할을 잃은 사람들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영화 올리버트위스트의 배경인 산업혁명 시절은 공장 굴뚝연기로 죽음의 도시와 빈민의 역사.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그렇게 낯선 도시의 노동자가 되었고 매일매일 엄청난 노동 앞에 내몰렸지만 곤궁한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도시로 흘러든 가난한 농민들을 역사는 빈민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대대로 농사짓다가 양떼 일터를 빼앗기고 농민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 이들은 자신의 역할과 인권을 찾기 위해 기계를 파괴하고 자본가에 맞서 협동조합운동 속에서 자신의 쓸모를 발견했다.

오늘 이 시대에 협동조합이 다시 호출된 이유는 쓸모와 역할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실버푸어 다양한 이름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쓸모를 잃고 있는데 ‘필요’는 절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절대 비교가 어렵지만 1844년 영국의 오늘과 지금 우리의 오늘이 체감하기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투(me to)와 커밍아웃(coming out)하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 직면한 인간 대중들은 자신들에게 쓸모 있는 것들을 시대정신 속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을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거대한 조류”를 뜻한다고 하였다. 어떤 현상이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한 공동체의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메가트렌드라면, 협동조합 설립 거품이 꺼지고 나서도 서울시에만 매달 30 ~ 40개 협동조합이 꾸준히 생기는 현상은,

지금 여기보다 그 어딘가로 흐르고 있다.

ICA가 2012년 만든 블루프린트의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절에서 협동조합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조합원이나 선출직 대표, 경영자, 직원 등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항상 교육이 가진 넓은 의미의 가치를 인정해왔다.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나라에 있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조합원은 자신의 협동조합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인 읽기와 계산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필요로 했다.

스웨덴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가였던 아너스 오르네는 협동조합이 왜 현재 스웨덴 사회의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협동조합이 모세혈관이 흐르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비열하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공동 노력과 열망이 특정한 방향으로 발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과 의지력이라는 요소가 가치를 발휘한다.”¹²⁾

2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성장의 비빌 언덕으로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한국사회의 이슈는 ‘여협’이다.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가 오래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하나, 이렇듯 집단적·지속적으로 혐오를 고조시키는 경우가 드물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존 그 자체가 버거워지면서 현실과 자아에 대한 불만이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되고 특히 SNS 환경에서 그 심리가 쉽게 증폭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녀의 장벽을 넘어서 경험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 시공간이다. 노동과 소비로 나뉜 성역할을 해체하고 삶을 창조하는 활동으로의 노동, 돈벌이 도구가 아닌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일’, 개인적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여가’를 찾아야할 때이다. 또 맹목적인 경쟁에서 기원하는 학습을, 자아를 만나고 서로를 살리는 ‘배움’으로 바꿔내야 한다. 이 때 협동조합은 유용한 그릇이다.

협동조합은 초기부터 그러한 공동성을 지향해왔다. 1844년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에서 여성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의결권을 주었는데, 이는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것(1928년)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 ICA가 정립한 협동조합 7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일체의 차별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천명한 것도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은 여성들이 억눌리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마당이었다.

¹²⁾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2015), 아너스 오르네 저. 이수경 역. 그물코출판사

1980년대 생협 운동의 주역, 2014년부터 본격화된 여성 100%로 이뤄진 여성협동조합들, 서울의 24개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어머니들. 이들을 보면, 보편적인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서 양성 평등은 자연스럽게 성취되고, 협동조합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 멋진 실험실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 여성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8 서울 여성일자리 비전포럼’에서는 경력단절에서 ‘셀프 고용’의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창업사례발표가 있었다. 고용을 당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직접 신산업을 창출해나가는 새 판 짜기이다.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연구해왔다. 이들에게 재취업 이후 고용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였다”면서 “마을공동체와 맞춤형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이 여성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좋은 예”라고 전했다.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대표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세우고 에너지 전환운동을 시작해, 에너지자립마을 중 최초로 12년엔 마을기업을, 16년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18년엔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모두 3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했다.¹³⁾

서울 자치구 마다 강사양성과정이나 전문 취업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과 업종에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한 동기들과 학습공동체모임을 꾸준히 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3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넘어서는 청년들로

협동조합은 2007년~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극도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새로운 세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생존하기 위해 더욱 냉엄하고 불평등해진 세계에 그들의 경제적 사고를 맞춰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정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 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과 학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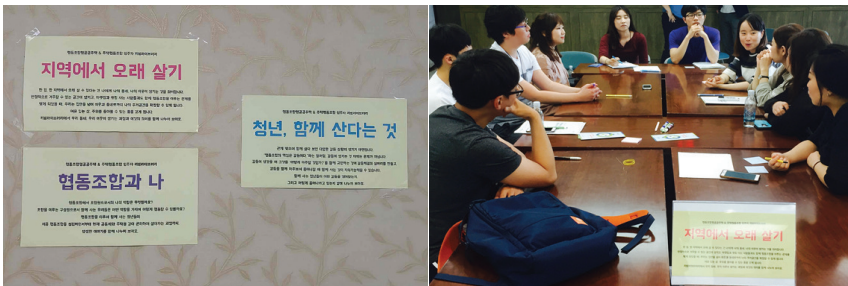
이는 협동조합 모델이 주식회사와 동등하며 활기차고 성공적인 기업 형태임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지는 협동조합이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평등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어내는 ‘미래의 설계자’임을 인정한 것이다.¹⁴⁾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협동조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 역시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대안적 선택’으로 협동조합

을 고려하거나 뛰어드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사업기회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주거공동체,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 이슈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기도 한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청년 이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6)에 따르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을 선택한 이유 중 협동조합의 가치와 민주적 운영방식에 끌렸기 때문(46%)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게 된 동기로는 가치실현(33%)과 사회문제 해결(25%)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 유형별로 볼 때, 청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을 주로 설립하고, 직원협동조합은 특히 30대 미만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청년들에게는 자금력이나 사업 경험 측면에서 볼 때, 곧바로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기존 협동조합에 일단 조합원이나 직원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정보도 충분히 얻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 청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나 협동조합에 대한 접촉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대문구청청년주택협동조합 교육 중
사람책 과정 2016. 6. 18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소식지
<협동다반사> 창간호 16. 6. 26
협동조합 설립지원필수교육 청년특화
과정에 참가한 청년들 인터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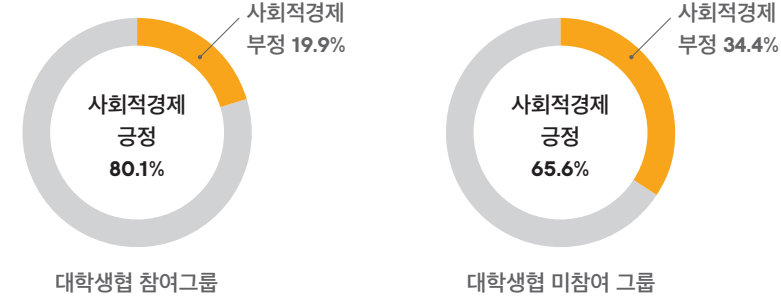


13) 여성신문, “성장 시대, 일자리 만들어 ‘셀프고용’으로 새 판 짜다” (2018.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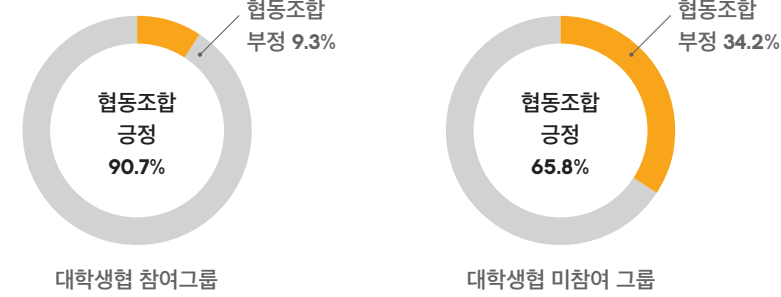
14)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2017),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역

모심과살림연구소, 대학생협, 청년연대는행 토닥과 함께 2018년 9월 1,652명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과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 드러 난다. 설문 결과 협동조합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2%, 사회적경제 관해서 아 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 불과했다. 하지만 대학생협을 경험했거나 활동하고 있 는 학생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긍정 요소가 90.7%에 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긍정도 90.1%로 높기에 향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확장에 있어서도 대학생협 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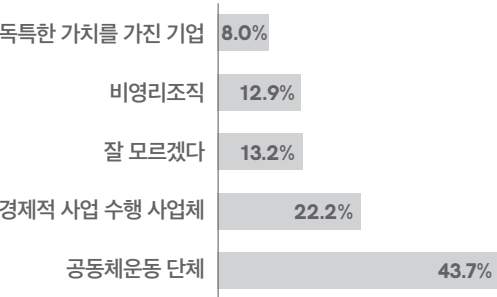
대학생협 참여 그룹별
사회적경제 긍정/부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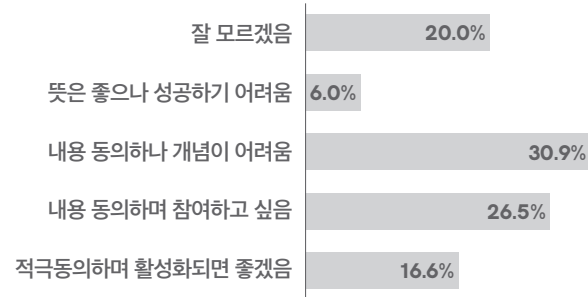
대학생협 참여 그룹별
협동조합 긍정/부정 인식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



15) 서울시 청년협동조합 창업생태계 지원 방안(2015), 청년허브 연구

지역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더 잘 안다고 답했다. 협동조합기 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총 14,029(사회적협동조합 포함)개이며, 이 가운데 일 반적협동조합은 12,876개(2018년 10월 기준). 이 중 지역별로는 서울 3,046개, 경기도 2,201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에서 쉽게 협동조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인식 차이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창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협동조합 열기는 50~60대 은퇴세대.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대 (38%)이고 60대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0대 미만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비중은 겨우 13%에 불과하다.¹⁵⁾

협동조합을 통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발 견된다. 이는 청년취업과 협동조합을 연계한 실험들이다. ‘해방촌 빈가게’는, 해방촌 빈 집-주거와 생활을 고민하던 청년 서너 명이 함께 만든 생활 공동체서 시작하여 구성원 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공간이다. 이들이 뭐든지 함께 ‘종합 작업장’텃밭 가꾸기, 수화 배우기, 음악 레슨, 목공 등등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런 창조성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끈끈한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만 ‘협동조합’이라는 구조가 또 한몫한다. ‘빈 가게’에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합비 3만원에 매월 회비 1만원 이면 조합원이 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면 일시적인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임금을 포 함한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에 차라리 초기에 같은 고생을 겪더라도 협 동조합 모델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청년영화인 공정영화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 사례.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협 동조합 공부에 열심이다가 "청년 영화인 중 93%는 비정규직이고 평균 연봉은 220만원 에 불과하다. 왜곡된 영화시장 구조에 나 자신을 끼워 넣기보다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 는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다. "독립영화 스태프로 일하 려면 돈 받을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나아요. 대부분 감독들이 ‘술 사줄 테니까 일 한 건 통치자’고 하죠. 박봉의 청년 영화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 제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 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2016년 말부터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분야를 택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주택공급, 에 너지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소라 이사장은 “조합의 다양한 활동 그 자체가 교 육으로 기획되고 학습의 결과가 체화된 조합원들은 점차로 조합 전체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구성원들이 집단을 성숙하게 하고 함께 조합을 이끌 것이다.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합을 통해 조금씩 경험한 연대와 주체로의 역할 은 앞으로 마을 혹은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

이 주택협동조합은 기존 임대주택의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비용이 아닌 자치, 협동, 연대의 작동 원리를 통해 주택과 공동체를 가꾸고 있다. 계약 갱신권, 주택 권리 등을 통해 주거권을 경험하고 반사회, 역할 분담(집사, 시설 담당, 회계 등), 일상적 마주침을 통해 소통하고 협의하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또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관리를 스스로 해나가며 서로 배움을 통해 삶의 기술을 쌓아가는 것 등 아주 작은 경험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협동으로 주거문제 풀이에 나선 것이다.

개인적 고민에서부터 사회 이슈까지 “어떤 주제든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어서 좋다”라는 이들의 대화들은 개인의 일상과 삶을 자연스럽게 사회와 정치로 연결한다. 집주인과의 관계 등으로 불안했던 청년 세입자들은 주체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주거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동력, 즉 시민 역량을 축적해나갈 수 있었다.¹⁶⁾

4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 융합함으로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사회혁신’이다. 또 혁신의 방식을 ‘서로 다른 것과의 만남과 수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 영역의 기획들이 속속 성과를 내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화두가 시민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흐름 속에 시민운동도 너에 대한 개혁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대안을 찾고자 분주하다. 이를 위해 사람과 자원이 더 많이 연결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오직 다른 영역과의 협력(collaboration)이 중요하게 되었다.

협력의 흐름은 2015년 들어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사이, 나아가 시민사회-공공-기업의 3자간 파트너십으로 변지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정부나 시민사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빈곤의 문제, 에너지 위기, 도시재생, 건강과 안전 등이 그런 예일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해왔던 자원봉사 모임이나 가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가능한 법인을 만들고 싶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협동조합 법인은 영리와 비영리 사업을 모두 다하는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독특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공공의 영역을 사람 중심의 경제를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¹⁶⁾ 평생학습대토론회 협동조합 토론회 발제문(2017), 임소라 이사장,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IV 평범한 사람들의 평생학습공동체,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생각보다 힘이 켜다. 협동조합으로 경제뿐 아니라 노동의 문제, 국가, 사회 혁신까지 가능하다는 걸 눈여겨 본 한국이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딱딱 2012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기대하나 고전 중인 우리 협동조합들의 현장에서는 오늘도 사회자본¹⁷⁾을 쌓고 있고 그 바탕은 일상 속의 매 순간 쌓아 오른 시민성장의 한 뼉 더 학교 수업의 일환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세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 타인을 자신만큼 소중히 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 탄생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성훈 부이사장의 말은 그 핵심을 파고든다.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이 사회의 논린데, 계약 관계죠. 다르게 표현하면 ‘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항상. 근데 연대나 나눔이나 협동은 ‘니가 하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게 나부터 시작한다는 말뜻이에요. 니가 그래야지만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내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는 거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가 하든 말든 내가 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그게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그 다음에 비로소 그게 독립적인 인간이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남과 더불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협동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채로, 협동조합의 가치나 원칙이 얼마나 와 닿을 수 있을까? 사실 협동조합 관련 강의를 하다보면 많은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협동조합의 원리에 쉽게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진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을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철저한 계약관계도 아니고, 철저한 친목관계도 아니면서, 협동이라는 방식으로 그 둘을 잘 융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 우리는, 협동의 안 좋은 결과들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협동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시너지는 잘 믿지 못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숫자만큼 우리 사회에는 함께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혼자일 때보다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학습모임으로 시작한 무수한 협동조합들을 통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사회연대의식이 결국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시민으로 성장시킨다. 연대는 조합 속에서 조합원들이 배우게 되는 ‘협동의 의지와 노하우’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던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¹⁷⁾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또한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자본 [社會資本, social capital]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광형모

자원봉사이음 실행위원

I 적폐청산을 위한 자원배분

1 촛불혁명, 그 후

19세기말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는 세계사적인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만 보면 다음과 같다.

항쟁	년도	항쟁 규모
동학농민혁명	1894	최대 100만 명 참가, 30여만 명의 사상자
3.1운동	1919	3개월 동안 시위횟수 2000여회, 참가인원 200여만명(이만열), 7,509명 사망, 15,961명 상해, 46,948명 구금됨
4.3항쟁	1948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 30만명 중 3만명 이상이 학살됨
4.19혁명	1960	매회 10만명 이상 시위 참가, 사망 185명, 부상 1500여명
5.18항쟁	1980	당시 광주시 인구 73만명 중 1주일 동안 매일 수만명씩 시위 참가, 직접 사망 193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
6.10항쟁	1987	전국 곳곳에서 300~500만명 시위 참가

이렇게 수백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정점에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이 있다.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했으나 사고 한 건 없는 평화적인 집회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그림 1] 역사적 항쟁들

2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이게 나라냐’ ‘적폐청산’이었다. 4.19혁명, 5.18 항쟁, 6.10항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시민들이

비로소 ‘국가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성이 제도화 된 것이 국가’라면(윤여준) 적폐가 국가의 기틀을 좀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근본,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술한 적폐청산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시한 적폐청산 과제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대 역점과제는 적폐청산이었

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은 적폐청산 대상으로 첫 번째, 검찰·국정원, 두 번째, 재벌, 세 번째 언론을 꼽았다.

검찰과 국정원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작 국민적 저항을 부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이들 기관이 자유롭지 않다는 시선 때문으로 보인다.

재벌 적폐 해소가 두 번째로 꼽힌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전경련, 삼성, 롯데 등 재벌이 정경유착을 통해 탈법행위에 앞장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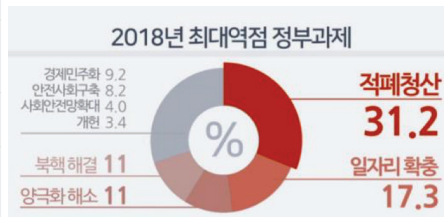
세 번째로 언론을 꼽은 것은 세월호참사 보도 태도에서도 나타난 ‘기레기’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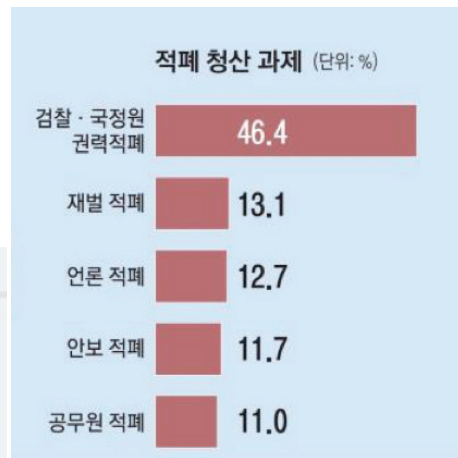
[그림 2] 여성신문 2016.10.29

범주	세부과제
6대 긴급현안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혁 추진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재벌체제 개혁	재벌총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중소상인 살리기 총수임기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만 18세 선거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 선거제도 개혁	최저시급 1만원 반발수입 중단, 쟁값 보장 노조 활동 관련 손해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국정원 개혁(수사권 폐지) 국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집회, 시위의 자유 확대 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공안통치기구 개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권리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공공의료 강화, 의료상업화 중단
위험사회 구조개혁	

[그림 3] 연합뉴스 TV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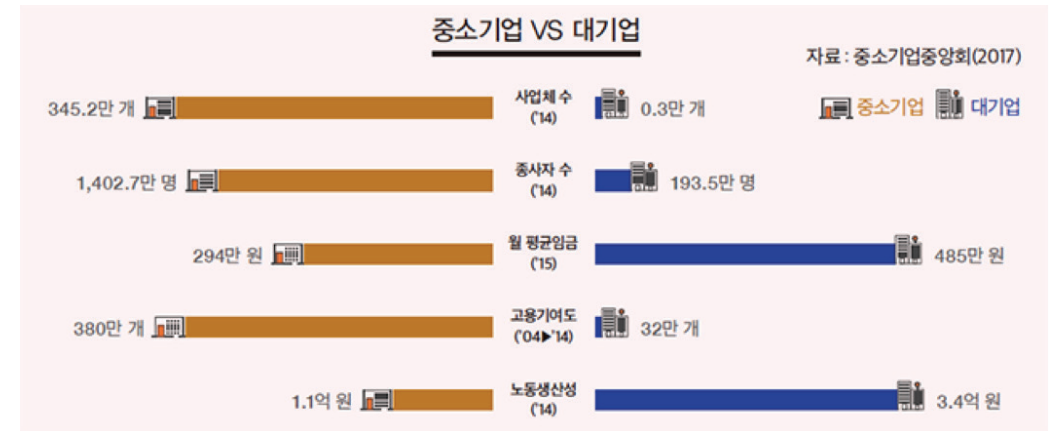
[그림 4] 연합뉴스 TV 2018.1.2



[그림 5] 연합뉴스 TV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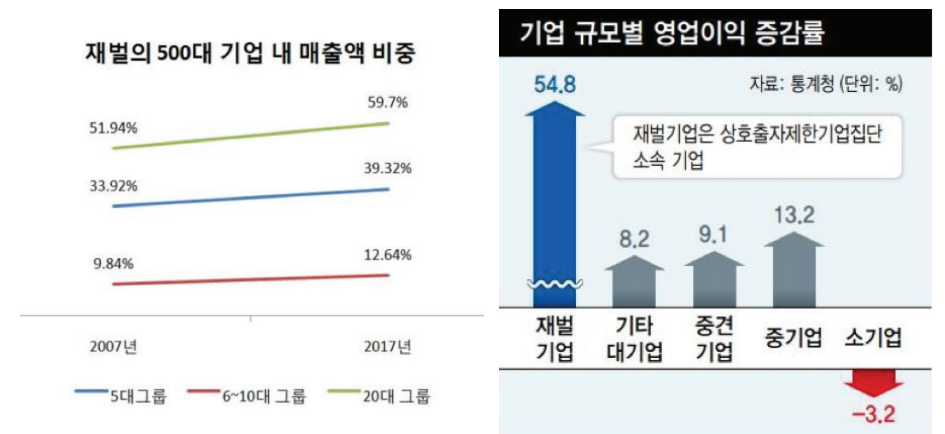
3 적폐청산을 위한 과제

하지만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친자본, 친대기업, 친수도권, 친개발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친노동자, 친시민, 친중소기업, 친지방, 친환경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업체수나 종사자수, 고용기여도에서 대기업을 훨씬 뛰어넘지만 경제적 집중도는 대기업에 크게 뒤진다. 지원규모에서도 크게 다르다.



[그림 6] 미디어 참여와 혁신, 2017.5.4

그러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바로 정치다(David Easton). 가령 조세, 교육, 과학기술, 농업, 고용, 의료, 부동산, 복지, 환경, 수자원관리, 국방정책의 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림 7] 경제개혁연구소, 한겨레, 2018.8.29

[그림 8] 한겨레 2018.12.6

수도권의 인구, 자원 집중도 매우 극심하다. 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OECD 중 사회복지 지출은 바닥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국가전략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그림 9] 조세일보 2015.2.23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306,189	329,026	334,509	367,536	411,228
중소기업	44,600	25,849	7,776	16,852	15,361
합계	350,789	354,875	342,285	384,388	426,589
대기업 비중	87.29%	92.72	97.73%	95.62%	96.40%
지원격차(배)	6.87	12.73	43.02	21.81	2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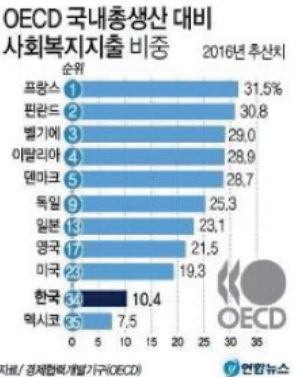
수도권의 인구, 자원 집중도 매우 극심하다. 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OECD 중 사회복지 지출은 바닥 수준이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적폐청산의 동력을 떨어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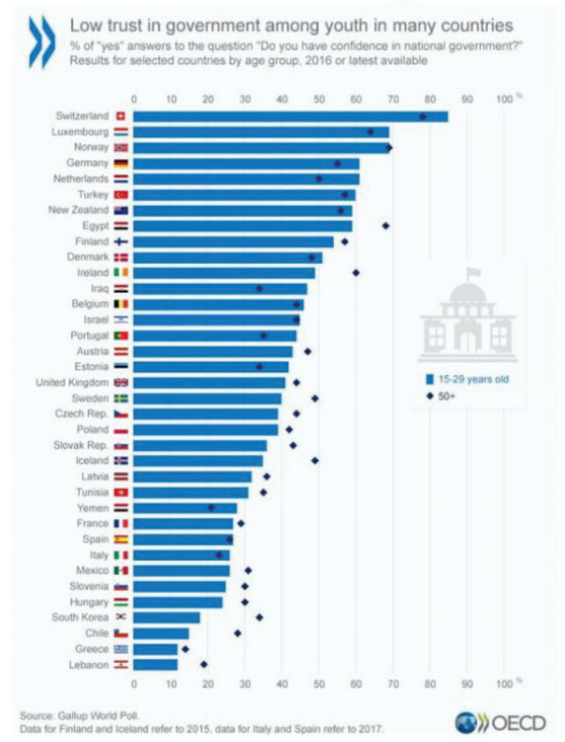
[그림 10] 파이낸셜뉴스 2018.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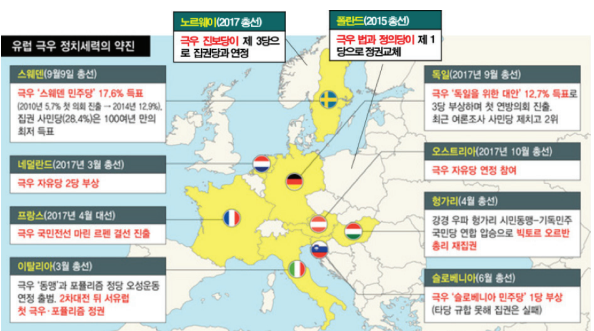
[그림 11] 통계 포털 2018.10.11



[그림 12] 연합뉴스 2016.10.31



[그림 13] 연합뉴스 2016.10.31



[그림 14] 한겨레신문 2018.9.10

둘째, 흐트러진 공공성의 원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통치권력 (대통령)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나 태도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할 뿐 국가 전반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가는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거대한 관료시스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향, 전략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보수정권도 관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데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적폐청산의 진정한 효과는 경제를 밑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형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것,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수준이다.

민주주의란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드러난다. 재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은 자원배분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학력(學歷)중심 사회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곳에 집중해서 학력(學力)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펴주어야 한다. 독재란 자원배분을 독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사업은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대표적인 예이다. 시민

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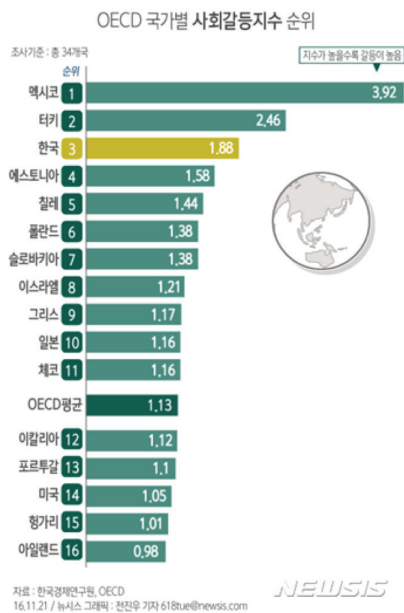
셋째, 생활적폐 청산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극우 돌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은 거의 유일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성평등지수는 세계 118위이다. 부패인식지수도 낮다. 세월호 참사는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일상의 적폐가 두터운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소위 갑질은 재벌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실, 사무실, 학교, 식당, 주차장 등 일상 곳곳에 편재한다.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탓에 장

애인 엄마들은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라며 절규하고 있다.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단적인 사익 추구, 배타성, 혐오 태도는 적폐청산 동력을 갉아먹는다. 이러한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시민적 자원을 재구성 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폐청산의 동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생활 속 적폐청산을 책임져야 한다. 적폐청산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림 15] 뉴스 2016.11.21



[그림 16]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성격차보고서 2017
국민일보 2017.11.3



[그림 17]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성격차보고서 2017, 국민일보 2017.11.3



[그림 18] 노컷뉴스, 2017.6.29



[그림 19] 노컷뉴스, 2017.6.29

[그림 20] 노컷뉴스, 2017.6.29

넷째, 시민들의 욕망을 어떻게 조직하고 배분할 것인가이다. 사회적 자원은 권위의 힘을 빌어서 배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비권위에 의한 배분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문제의식, 정의감, 참여의지, 인권, 사회적 신뢰, 연결망, 갈등조정 능력, 생명존중, 상상력, 공감과 연대 등은 분명히 사회를 움직이는 자원이지만 비권위적 배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민적 자원을 어떻게 조직, 배분, 편성하느냐에 따라 거버넌스, 갈등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창의력, 삶의 질도 달라진다. 가령, 경제운영 프레임, 교육운영 프레임은 시민사회 스스로 해내야 할 몫이 있다. 이러한 시민적 자원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요구사항’일 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없게 된다. 시민들은 방관자가 된다.

II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의 잠재력

1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자원봉사는 이러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매우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자원봉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자원봉사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다. 2018년 자원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8월 28~29일 충북 제천에서 개최한 [제 11회 자원봉사컨퍼런스]의 주제는 ‘자원봉사와 사회적 가치 실현’, 9월 10일 아모레퍼시픽 신봉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연계 포럼]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였다. 그밖에도 전국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체가 지역사회 의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 사회적 가치를 보는 관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가치’라는 키워드를 먼저 꺼내든 사람은 문재인대통령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그림 2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8.8.28



[그림 2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8.9.18



[그림 23] 거제타임즈 2018.4.19



[그림 24] 경기신문 2018.4.30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윤과 효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② “우리시대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중시, 사회체험교육의 역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분열된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송홍주, 남해군자원봉사센터 홍보위원장. 남해신문 20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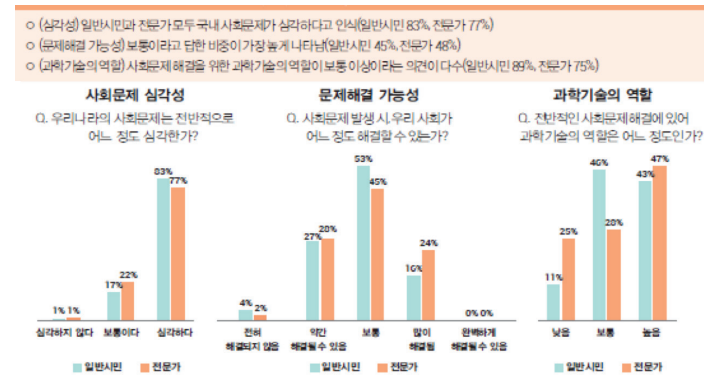
③ “사익을 초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안전, 봉사, 연대, 협력, 균형, 생태, 윤리, 인권, 공정 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나 배제된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김정렬, 2018.3.4.)

④ “만약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국가나 기관단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히 들이쉬고 있는 공기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과 똑같은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한다... 철도파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파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자원봉사의 기여도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오예원, 원불교신문 2011.11.18.)

①은 사회적 가치의 성격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②와 ③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④는 자원봉사가 사회 운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통점은 자원봉사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봉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란 어떤 것일까? 우선 시민들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다.



[그림 25] 일반시민 1,000명, 전문가 432명 대상 설문조사, KISTEP INI 2018 가을호

옆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들은 83%, 전문가들은 77%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한편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이렇게 들고 있다.



[그림 26] 사회문제 해결형 10대 과제 모델

이것은 자원봉사를 예산 절감을 위한 공짜노동, 필요할 때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유휴 노동인력, 막 부러먹어도 되는 서비스 정도로 여기던 풍토에서 매우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자원봉사의해>는 3년간의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발표하였다.

구분	영역	항목
과정	주도성 (3)	자원봉사자들이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가?
	혁신성 (3)	이슈와 대상이 새로운가?
		문제해결 방식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가?
		새로운 기술(예. SNS, 빅데이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였는가?
	협력성 (4)	문제해결에 적합한 파트너들이 참여하였는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 물적자원(예. 재정, 물품, 시설 등)이 적절하게 동원되었는가?
		프로젝트 참여자들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프로젝트 참여자들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는가?
결과	사회변화 (5)	목표로 정한 사회문제 해결 또는 개선에 기여하는가?
		해당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향상되었는가?
		참여자(예. 봉사자, 대상자, 기관 등)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해당이슈와 관련된 법과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확산성 (6)	본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가?
		본 프로젝트가 다른 이슈나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본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림 27] 자원봉사 성과지표 기본 프레임',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 평가포럼, p20



[그림 28]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 평가포럼

그런데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비중이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질서의 틀을 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즉, 자원봉사가 ‘저기 있는’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 보다 스스로 낡은 질서를 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2 낡은 질서를 깨기 위한 자원봉사의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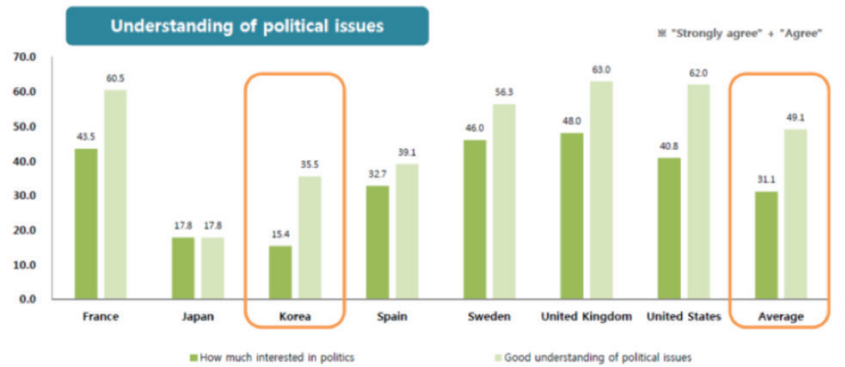
자원봉사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자원봉사는 낡은 질서를 깨기 위해서 어떠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을까?

첫째, 융이성이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유연성이다. 자원봉사는 물과 같아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 셋째, 개방성이다. 자원봉사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넷째, 상상력이다. 자원봉사는 다양한 사람, 영역과 만나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이다. 다섯째, 융합력이다. 자원봉사는 노동, 교육, 환경, 복지, 문화,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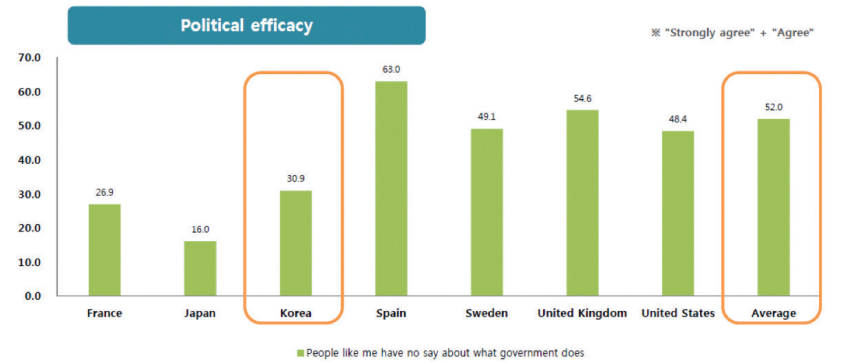
3 전달과 참여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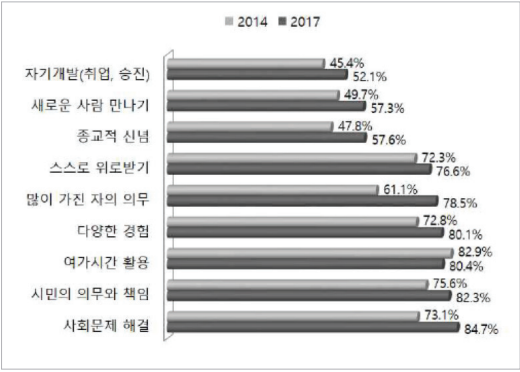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는 전달체계가 아닌 참여체계의 성격을 지닌다. 이 점이 전달체계로서의 복지와 자원봉사의 차이점이다. 즉, 복지가 국가적 자원을 전달하는 체계라면 자원봉사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자원을 배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펴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자원봉사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래 그림 31,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평균보다 낮다. 뿐만 아니라 정치효능감(정치에 대한 영향력 인식)도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시민은 자원배분으로서의 정치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그림 29]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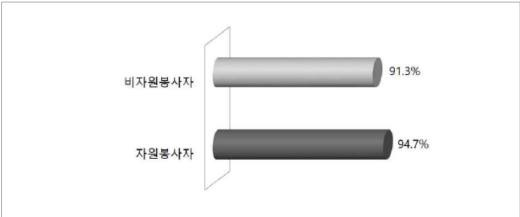


[그림 30]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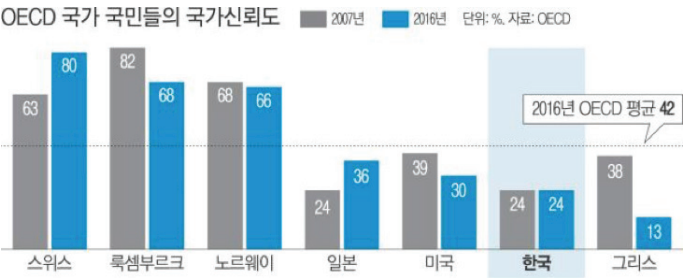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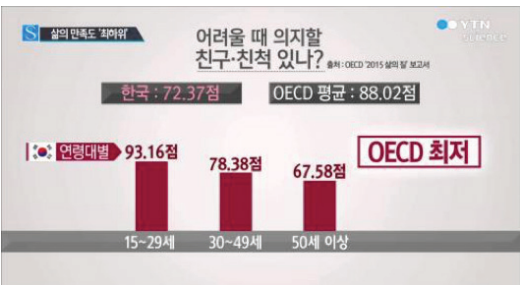
[그림 31]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그림 32]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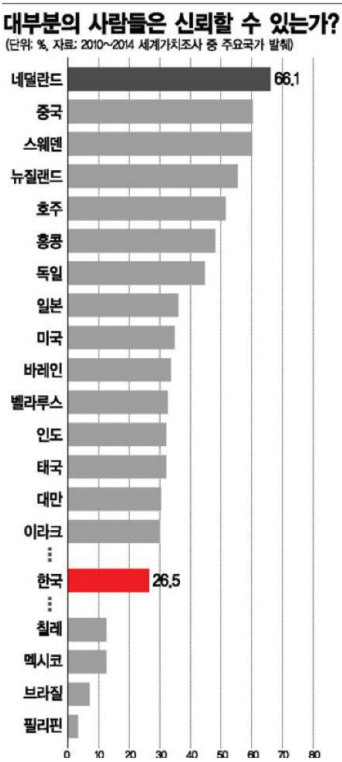
[그림 33] 아시아경제, 2015.6.16



[그림 34] YTN, 2016.7.24

이러한 확장성과 잠재력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동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높았다. 물론 투표참여 행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그림 32).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생산된 신뢰와 유대, 관용 등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조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들을 의미한다.”(Putnam 1993). 사회자본은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며 사용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국가에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신뢰(그림 35)도 높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가 있는가’는 OECD 중 최저 수준이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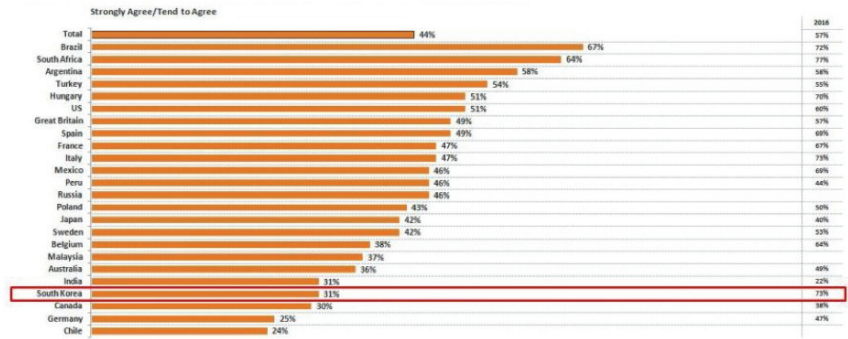
[그림 35] 아시아경제, 2015.6.16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글로벌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가 조사 발표한 ‘포퓰리즘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면 ‘자국이 쇠퇴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2016년에는 73%가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18년에는 31%에 그쳤다.

이는 자원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4년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최고의 신뢰도 기록을 보여준다(「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p92).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가 82%로 비자원봉사자 66.4%에 비해 훨씬 높다(그림 37).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

[그림 36] 아시아경제, 2015.6.16



[그림 3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6%	2.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17.4	31.0
어느 정도 신뢰한다	75.1	64.4
매우 신뢰한다	6.9	2.0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0.000

III 자원봉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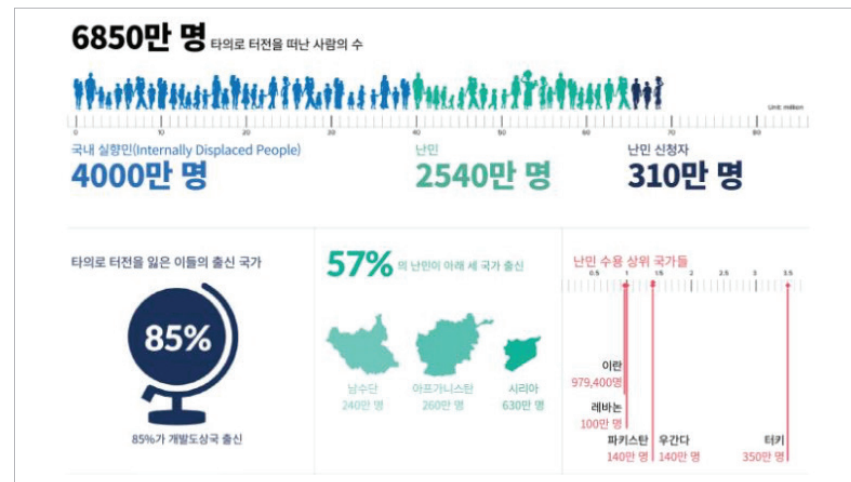


[그림 38] 25차 세계자원봉사대회

2018년 한국 자원봉사를 관통했던 키워드가 ‘사회적 가치’였다면 세계자원봉사의 키워드는 좀 더 포괄적이다. 이는 2018년 10월 17~20일 IAVE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개최한 25차 세계자원봉사대회(World Volunteer Conference)에서도 확인된다. 이 대회의 주제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이었다.

이 대회에서 국제적십자자연맹 아태지역본부 혁신조정관인 아라시 크리쉬난(Aarathi Krishnan)은 자원봉사가 직면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폭력과 빈곤-가짜뉴스, 갈등, 사이버 전쟁
- 기후변화-1억4300만명 난민 발생할 것
- 새로운 공동체 형성-불평등과 이주 등으로 25억명이 영향 받을 것, 8%가 50%의 부 차지,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
- SDGs를 위해 2조 5천억 달러가 쓰일 것
- 권력과 거버넌스-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 등의 영향
- 일의 미래-34%의 여성은 교육받지 못함, 50%의 여성은 빈곤지역(the south)에 거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더 생길 것
- 고령화에 대한 대비 안되어 있음
-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실험들
- 새로운 형태의 참여



[그림 39] 유네스코뉴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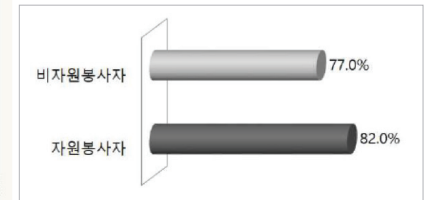
이 중에서 특히 양극화와 난민문제는 향후 인류사회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난제가 될 것이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현재 세계 난민 숫자는 6000여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착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그림 40).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OECD 난민 인정 현황 2000~2017년

국가	난민 인정(명)	인정률(%)	국가	난민 인정(명)	인정률(%)
독일	689,961	31.7	멕시코	8,921	55.7
미국	402,745	44.6	스페인	4,863	7.5
프랑스	253,692	16.5	폴란드	3,985	5.3
영국	224,718	19.4	뉴질랜드	3,680	19.8
캐나다	207,843	51.8	룩셈부르크	3,242	14.2
터키	149,887	88.1	체코	2,823	5.7
오스트리아	104,253	39.6	헝가리	2,501	5.6
스웨덴	81,110	10.2	칠레	1,472	40.9
벨기에	75,771	25.3	이스라엘	964	3.4
OECD 평균	69,607	24.8	대한민국	708	3.5
호주	65,678	29.4	솔로몬아	487	9.8
스위스	64,828	16.8	일본	479	0.9
네덜란드	57,889	15.2	리투아니아	436	15.4
노르웨이	47,143	17.6	슬로바키아	429	5.3
이탈리아	40,162	7.8	포르투갈	408	13.7
덴마크	29,335	26.9	아이슬란드	250	11.5
그리스	21,997	9.4	콜롬비아	247	18.6
아일랜드	11,722	12.0	에스토니아	206	23.9
핀란드	10,501	17.7	라트비아	140	10.6

※ 출처: UNHCR

[그림 40] SBS뉴스, 2018.7.7



[그림 41] '나의 거주지는 타국 이주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행안부 위 자료

다행히 한국사회의 타국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은 2017년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이 조금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의 숨어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에 맡겨진 역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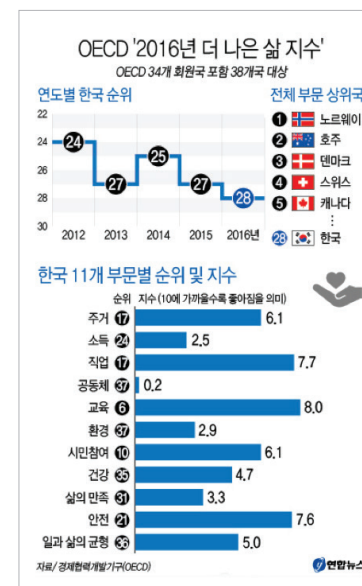
IV 자원봉사와 삶의 질

1 사회적 자원 배분과 개인의 생활패턴

앞에서 언급한 거대·미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배분을 바꾸는 것과 함께 개인의 생활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참여의 본질이다. 즉, 시민참여의 시선은 바깥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구조 안으로 향해야 한다. 생활구조와 사회구조는 서로 조응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시민들의 생활구조는 사회적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나가기에는 너무 팍팍하다. 그리하여 팍팍한 생활구조는 사회구조를 황폐화하고 다시 팍팍한 생활구조로 환원된다. 계속 악순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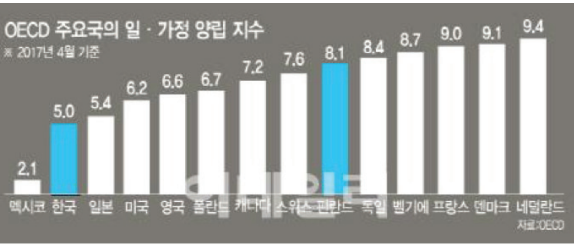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는



[그림 42] 연합뉴스 2016.6.15

OECD중 바닥 수준이다. 부문별 지수를 보자면 주거, 직업, 교육, 시민참여, 안전은 비교적 높으나 공동체는 매우 낮고 환경, 삶의 만족은 낮은 편이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과 삶의 균형 지수(Work and Life Balance)도 낮은 편이다. 아직 한국인의 노동시간의 세계 최장 수준(그림 45)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심각하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10년 후 생존율은 20%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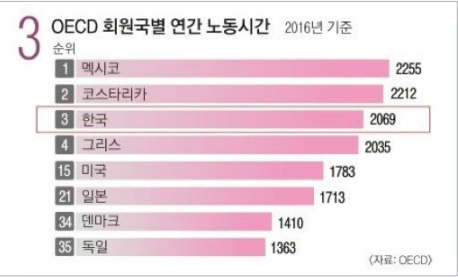
이렇게 장시간 노동,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린다는 것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휴식, 돌봄, 보육, 수면, 취미생활, 배움에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엄마들은 마트에서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번 돈을 그나마 아이들 학원비에 쏟아 붓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돌봄을 희생해야 한다. 삶의 질을 희생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 하지만 악순환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소득빈곤 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에 시달린다.



[그림 43] 이데일리 2018.1.8

최근 10년간 자영업 신규 및 폐업 현황				
연도	신규(만)	폐업(만)	자영업 생존율 (만·%)	자영업 총계
2007년	1,060,064	848,062	20.0%	4,526,790
2008년	1,051,736	794,131	21.9%	4,750,114
2009년	965,245	785,788	18.4%	4,890,242
2010년	968,958	805,506	18.5%	5,044,701
2011년	994,388	848,235	15.0%	5,177,911
2012년	956,429	833,195	12.9%	5,285,253
2013년	926,558	805,328	13.1%	5,379,751
2014년	1,015,629	761,328	25.0%	5,615,468
2015년	1,068,313	739,420	30.8%	5,904,201
2016년	1,100,738	839,602	23.7%	6,051,032
합계	98,685,114	8,057,393	(평균)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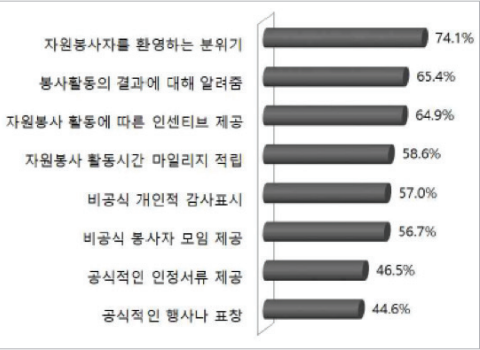
[그림 44] 이데일리 20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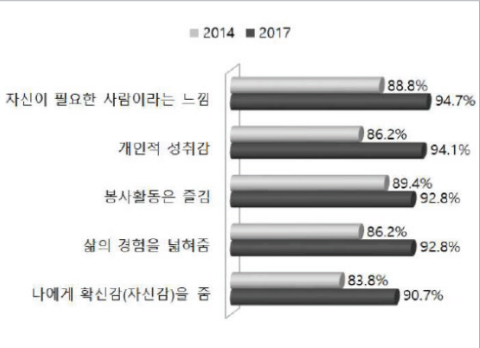
[그림 45] 서울신문 2017.11.15

2 노동의 변화와 자원봉사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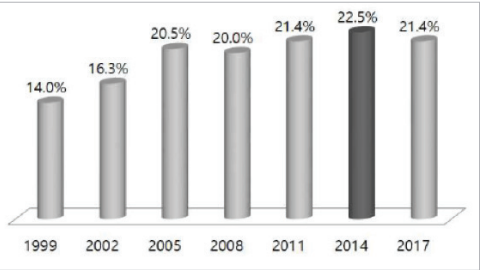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만 현실에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은 물질적 보상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그림 48은 ‘자원봉사자 인정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 선호도’(2017)를 나타낸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영 분위기, 비공식적인 개인적 감사표시, 봉사자 모임 제공,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더 원한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성취감, 즐김, 삶의 경험 등 정신적 보람을 중요시 한다(그림 46). 물론 시민들의 62%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실비 정도의 활동비)를 원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물질적 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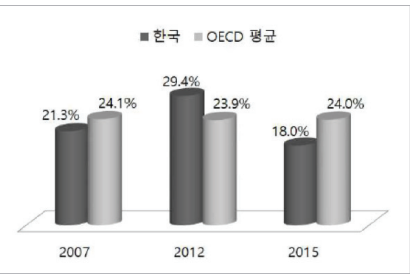
[그림 46] 행안부 위 자료



[그림 47] 행안부 위 조사자료



[그림 48]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행안부 자료



[그림 49] 한국과 OECD 32개국 자원봉사 : World Giving Index 조사 - 행안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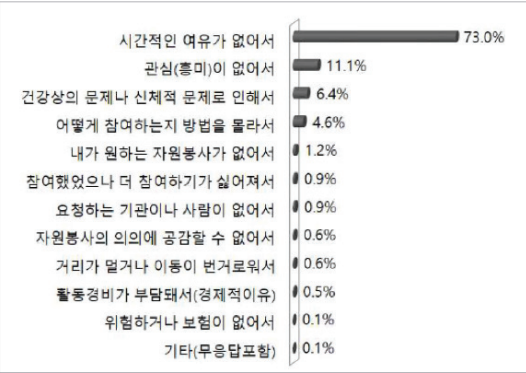
이렇게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림 50에서 보는 바와 2005년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14년 이후 하락세에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그림 49).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시민들은 시간빈곤에 시달리면서 의지와 관계 없이 생존노동 외에는 마음을 열 여유가 없다. 마음을 열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시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홍보, 캠페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기본소득, 적절한 노동시간, 적정임금,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해소, 노동양태의 변화 등 사회구조의 개편과 맞물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급노동으로서 자원봉사가 유급노동(임금노동)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것인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그림 51은 기업조직과, 노동,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50] 한국과 OECD 32개국 자원봉사 : World Giving Index 조사 - 행안부 자료

AI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 논의들 사이에 끼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시민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어쩌면 시민에게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꿈을 꿀 공간일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업조직과 노동 및 사회 관계 진화

	기업조직 진화	노동관계 진화	사회관계 진화
19세기 전반	· 소규모 가족기업들이 시장을 통한 계약의 연쇄로 연결 · 면화 경작자 → 종매인 → 제조업자 대리인→ 제조업자	· 계절 노동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경매 도매인, 경매업자, 보험업자, 중개인 · 숙력 장인들의 조합 형성	· 가내 농업과 수공업으로 필수품 보완 · 가족복지로 사회안전 보완
20세기	· 거래의 내부화를 통한 거대기업의 탄생 · 전문경영, 관리체제를 통한 대규모 기업과 기업집단 형성 ·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 형성	· 20~60세 정년보장 직장 시스템 · 경영자, 관리자, 사무직 노동자 층의 등장 · 대규모 생산직 노동조합 형성	· 남성 가장 노동자의 고용을 기반으로 복지시스템 구축 · 4인 핵가족 시스템 구축 · 최후의 고용주로서 복지국가
1980년대 이후	· 정보기술 발전으로 내부화된 조직이 외주화로 반전 · 본사 → 하청업체 → 외주업체 →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	· 균형일터의 형성(David Well) · 본사 정규직 - 비정규직 - 본사에 들어와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 외주 노동자, 프랜차이즈 점주 - 프랜차이즈 알바로 서열화	· 노동 격차에 따른 소득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소득의 불안정성 · 개인화, 1인 가구화에 따른 가족안전망 해체
현재와 미래	· 고용없는 플랫폼 기업 (우버, 에어비앤비) 등장 · 인간 노동 없는 AI, 자율주행자동차, Robot 등장	· 자유로운 프리랜서? ·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 개인의 해방? · 관계의 해방? · 보호의 해방?

[그림 51] ‘4단계에 걸친 기업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 사회관계의 변화’, LAB2050, 2018.2.28., 김병권

V 자원봉사와 배움

1 삶의 질로서의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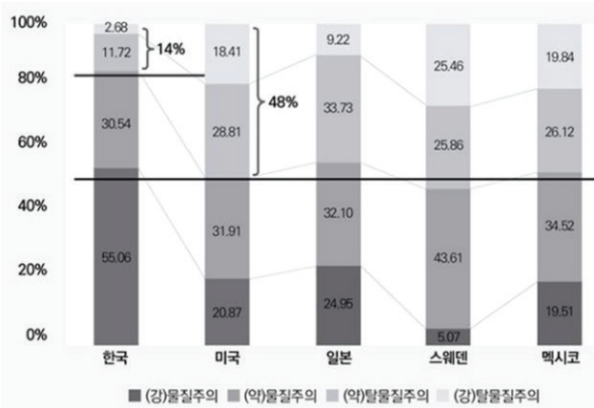
배움이란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세상과 창조적인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인간은 낡은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버림은 생산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노동은 생식과 아울러 인류역사를 잇게 한 두 축이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다. 인간은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자연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

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없다. 자연은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제대로, 충분하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을 인간의 생활에 알맞도록 바꾸어 놓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존재이면서도 그저 자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노동)으로 자연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생산의 역사이고 곧 노동의 역사인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자연, 사람, 사회운영 시스템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양한 노동양태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게 자연, 인간, 사회운영 시스템과 창조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다. 그것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노동양태는 삶의 질을 규정하기도 한다. 삶의 질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방식, 노동환경, 노동관계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노동양태를 형성한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면 된다.



[그림 52] 5개국 물질주의자 대 탈물질주의자 비교, 장덕진

연적으로 거품을 낳는다. 여기서 성장이 둔화되면 한국인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¹⁾ 따라서 한국인에게 성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할 지상과제이자 절대 가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시키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성장지상주의는 학벌주의와 다양한 서열주의, 승자/패자의 구별짓기와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윤상우).

무엇보다도 성장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난 반세기, 아니 20세기에 걸쳐서 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규정한 것도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어떻게 일했는가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적 생활태도가 강하다.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47.22%), 일본(42.95%), 스웨덴(51.32%), 멕시코(45.96%)에 비해서 탈물질주의자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첫째,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는 성장과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한다. 둘째, ‘한강의 기적’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다. 고속 성장은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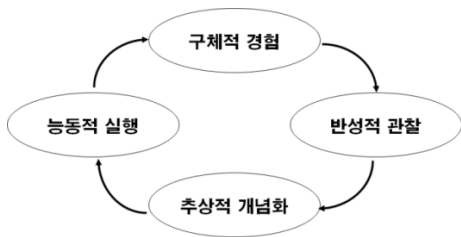
1) 장덕진,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김우창, 송복, 송호근의 양적 변주',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2016, p12.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 이기기 위한 경쟁력만이 사회윤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타인에의 배려를 내면화 한 시민, 공익에의 긴장감을 실행하는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은 없고, 국가 명분에 수직적으로 동원된 원자화 된 개체인 국민, 수평적인 관계에는 한없이 미숙한 존재만 남았다(송호근).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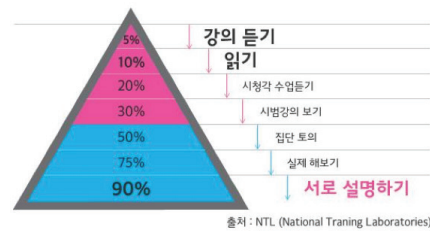
한국인의 가치관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기도 했다. 흔히 하는 말로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동안 많을 것을 배운다. 무엇을 배우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인은 분단 상황 하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러한 배움을 쌓았다. 그것은 분단이데올로기, 성장·성공이데올로기가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배움은 삶의 질 그 자체일 수 있다. 배움 안에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 모두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즉,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삶의 질을 규정한다. 배움은 더 이상 ‘하루에 몇 시간 학습...’ 등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2 생활패턴의 개편



[그림 53] 콜브의 경험학습 모형



[그림 54] 질문의 학습효과

위의 관점에서 보자면 배움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패턴은 물론 사회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은 그러한 구조 개편을 희망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개편의 주인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곧 자원배분이며 정치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편은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실천(Praxi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55는 실천(실행)이 관찰-개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순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는 경험학습적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행동(action)만으로는 배움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 행동을 배움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다. 행동은 질문을 통해서 비로소 프락시스가 된다. 그림 56은 상호질문의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을 통해 평생 배움을 생성한다.

자원봉사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션(ac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활동(praxis)이다. 자원봉사는 단지 빈 곳을 메꿔주는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한다. 자원봉사시민들은 시장논리에 찌든 삶의 방식

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꿈을 꾸다.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시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의식, 다양성, 사회적 관계 맺는 법, 협업하는 법,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세계관, 인격 형성이 달라진다. 소위 명문 코스를 밟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느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 협업하는 법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큰 배움은 없다. 자원봉사에는 그러한 배움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시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의 주인이 된다.

3 교과서 없는 평생학습

자원봉사는 배움을 필요로 하고 배움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공익성, 실천성을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는 배움을 통해서 서로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자원봉사와 배움을 통해서 갑질, 먹고 먹히는 생태계가 배려와 공존의 관계로 된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에서 구사하는 전략은 전파 혹은 확산이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캠페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가치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다. 자원봉사 수천시간을 해도 시민들의 의식은 별로 성장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확산이 아니라 확장성을 통해서 성장한다. 자원봉사와 평생학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지속성이다.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평생 배움을 반복(習)다는 것이다. 세대 자연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도전한다.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지속성은 핵심적인 속성 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오랜 반복 배움을 필요로 한다.

[그림 55] 시민의식 안 가르치는 한국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	18.4	20	54.3	63
교실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	15.9	28.7	60	60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	20.8	20.9	42.5	53

※ 2007년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4개국 초·중·고등학생 2,3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각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위: %)

둘째, 상호성이다. 자원봉사는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체계이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은 세상과 창조

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평생 터득해가는 것이다. 관계 맺기는 시민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다.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방침이나 원리,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실천성이다. 보통 자원봉사를 경험학습이라고 말한다. 즉, 자원봉사시민은 경험으로부터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은 실천(praxis)과 의식성장이 선순환 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실천과 의식성장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진다. 그림 56은 사회현장의 경험과 실천이 연결되지 않은 학교 울타리 안의 교육이 지닌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일상성이다. 배움은 어디에든 있다. 거리, 시장, 들판에도 있고 친구, 옆집 할머니에게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살아 숨 쉬는 현장이야말로 세상을 체험적으로 익혀가는 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는 일상에서 세상을 바뀌어 가는 촛불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

- 지역기반 소셜리빙랩을 중심으로

황석연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
시민해결팀장

| 2019 한국사회의 자화상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6·25 한국전쟁의 난리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 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 지 68년째다.¹⁾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인간문명의 거대 전환 시기에 영국에서 탄생했던 협동의 방식은, 김재도(81)씨는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이사로 평생을 함께 해왔다. 고등학교 1학년이

던 1954년 아버지 김채환(당시 46세)씨가 돌아가시면서 정류장을 물려받았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탑리에서 밤을 보낸 버스는 다음날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대구로 출발했다. 기사와 차장 등이 김 대표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비우는 동안 버스를 예열하는 것도 가족들의 일이었다. 부동액 대신 끓는 물을 냉각기 라디에이터에 부어 넣고 시동도 미리 걸어놔다. 이렇게 매표소와 구멍가게는 같은 공간이었다.

1976년에는 좁아터진 정류장을 지금 자리로 옮겼고, 대구에서 출발한 버스는 이곳 탑리를 지나 의성읍과 안동, 청송으로 뻗어나갔다. 1981년에는 버스 10대가 동시에 설 수 있는 규모로 정류장이 커졌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합실도 생겼다. 주변에는 덩달아 식당과 다방, 술집, 상가 등이 들어섰다. 시외버스가 황금기였던 1980년대에는 하루 매표 기준으로 2,000명이 정류장을 이용할 정도로 번창했다.

1990년대 고속버스와 열차가 대중화되고 자가용 보급이 크게 늘면서 시외버스 탑승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김재도씨는 그동안 몇 번이나 폐업신고서를 들고 군청을 찾아갔지만 “정류장이 사라지면 승객들이 눈비 맞고 기다려야 한다”는 만류에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69년이 지난 2019년, 정류장의 미래는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다. 지난해 11월23일, 하루 각 6회의 상·하행선이 절반인 각 3회 운영으로 줄어들었다. 승객이 없다는데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주민들의 사랑방이 잊혀져가는 것은 못내 아쉽다.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생(‘18.3분기 합계출산율 0.95)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기사에서 다뤄진 경북 의성군은 지자체 소멸위험지수가 0.158로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힌다. 65세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0.5이하면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0.2미만이면 소멸 고위



‘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에 달했던 경북 의성군 탑리버스정거장은 2019년 현재 하루 이용객이 20명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쇠퇴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론된다. 이런 공간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살려내려는 지역 리빙랩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¹⁾ 한국일보 방방곡곡 노포기행 “승객 하루에 20명이나 될까... 그래도 동네 사랑방 문 닫을 순 없지”, 2018. 11. 17. 전준호 기자

협 지역으로 분류된다. '13년 7월 228개 시·군·구 중 75개(33%)에 해당하던 소멸위기 지역이 '18년 6월 89개(39%)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²⁾

지역의 위기는 이렇듯 저출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13년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 인구가 4.5만명이던 것이 '17년에는 5.9만명으로 급증해 지역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2019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핵심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이 선도하는 모델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 함께 할 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본 글은 지역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생활의 재설계 과정을 통해 '공간을 혁신'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략과 그 실행 방안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주도 문제해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주도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Living Lab)-을 중요한 활동 도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탐리버스정류장이 소셜리빙랩 현장이 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는 가설에서 이 글이 시작되는 셈이다.

II 주민의 참여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일하는 부분을 늘려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사회혁신 싱크탱크 NESTA를 이끌고 있는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정보사회로 발전한 도시의 성장 과정은 필연적으로 도시혁신에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이어져왔다. 도시는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 및 인재유치를 위한 경제적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고,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참여와 협력, 투명성,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주목해왔다. 주민과 함께 공동 창조(Co-creation)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진화를 이어가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³⁾ 기술이나 도시주도 방식의 기존 진화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시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골 마을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발전전략을 모색한 유럽인들은 지역개발 이니셔티브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춘천시 석사천 주민들은 범람하는 하천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500m구간에 이르는 시민정원으로 조성해 산책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주민참여를 통한 리빙랩 실험을 도입한 '국민해결 2018'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된다.

지역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LEADER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역개발 실험을 장려하고 이웃한 지역의 협력을 도우며 지역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을 디지털화하고 공유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었다.⁴⁾

특히 LEADE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구현을 통해 지역개발의 소유권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시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주민에 대한 인적역량 강화 등이 핵심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리빙랩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현실성 높게 구성했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실행방안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 ① 기존의 지역개발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 등 차별적이며 혁신적인 개념을 구현
 - ② 디지털과 기술 전문가 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마을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다양한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③ 주민들이 특정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같이 토론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감 없이 표현하도록 장려
 - ④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 공무원, 컨설팅 회사도 참여시킨 것이 성공 요인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이란 관점에서 그 지향점은 마을공동체이며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로서 이제 '문제의 발견→주민의 등장과 성장→공간의 변화'를 주목할 때가 됐다.

1 문제의 발견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64시간이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상습적 야근자의 업무

2) 30년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지자체 Top10, 1.경북 의성군 0.158 2. 전남 고흥군 0.167 3.경북 군위군 0.174 4.경남 합천군 0.174 5. 경남 남해군 0.183 6.경북 청송군 0.195 7.경북 영양군 0.196 8. 경북 영덕군 0.203 9.전남 신안군 0.203 10.경북 봉화군 0.204,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3) Cohen(2015)은 스마트시티의 진화방향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서 스마트시티 1.0 기술주도 공급자 접근방식, 스마트시티 2.0 도시 주도의 기술 적용 방식, 스마트시티 3.0 시민 공동창조 방식을 도식화했다.

4) Liaison entre actions de de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 EU의 지역개발방법론



전남도청의 무안이전과 섬지역의 쇠락으로 목포 원도심은 사람이 살지않는 빈공간들이 늘어났다. 40년된 항구의 여관 '우진장'도 그런 곳의 하나다. 이곳을 '괜찮아마을'이라고 이름짓고 공간을 점령한 도시청년들이 섬관련 비즈니스 창업과 레지던시 시설로 이용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참여 주체로 청년이 주목을 받고 있다.

5) 서울시 관악구 난곡우체국 사거리 '행복마을 마더센터' 사례로 비영리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들 30~40명이 모여 부모가 1천~2천원에 차를 마시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사회적기업 (주)두꺼비하우징의 사례로, 빈집을 발굴해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들은 시세에 비해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집주인과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임장이 가능해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다.

7) 행정안전부 2018 시민공모 사업 '시민참여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목포 공장공장의 <괜찮아마을>사업이 대표적이다. 괜찮아마을은 전국의 청년을 기수별로 30명씩 목표에 모아 원도심 빈공간에 설립된 괜찮은학교와 괜찮은집, 괜찮은공장에서 청년 힐링과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 정착인을 배출함으로써 지역활성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용된다.

생산성(45%)이 일반 직장인(57%)보다 떨어지는 '야근의 역설'이 확인됐다. 야근은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장시간 근로 탓에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장시간 노동 외에도 많다.

2017년 서울에만 빈집이 8만 가구에 육박했고 경기도엔 빈집이 14만5000가구에 달했다. 2017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만7950명 가운데 30%가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법정정원을 준수한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했다. 서울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2~3시간 걸려 통학하는 실정이다.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점점 심해지는 지역격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성도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을까? 우리 동네 비어있는 빈집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까?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까?

내 일상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시민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주민들이 서로의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육아공동체

5)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은 빈집을 저렴하게 빌려서 리모델링한 후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사업6)을 시도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회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이 직접 제기한 문제를 관이나 시장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직접 해결에 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개선 사업-리빙랩(Living Lab)-이라 부르며 지원하고 있다.7)

2 주민의 등장과 성장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주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동단위 마을계획을 도입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를 구축한 서울특별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찾동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 지원사업과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정책을 내세웠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목적	주관
주민참여지원	동단위로 새로운 주민리더 발굴과 성장지원	동주민센터
	사업참여자, 신·구 주민리더 간 교류와 협력지원	동주민센터
마을기금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동단위 생활의제 발굴, 모금, 배분으로 마을기금 토대 구축	동주민센터, 주민운영위원회, 기부금 단체
마을계획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동단위 마을계획 직접 수립 및 실행	마을계획단
마을활력소	동주민센터에 주민참여형 공동체공간 조성 및 자율 운영	민관참여단,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나가는 '마을계획' 추진과정은 지역에 기반한 리빙랩(Living-lab)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주민 만남 및 동 현황 조사

주민 대표를 면담하고 학부모 모임과 같은 작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이다. 인터넷 카페나 SNS를 운영하기도 한다.

② 마을계획단 홍보 및 모집

마을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계획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 가구에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하는 단계다. 동장 명의의 손편지를 발송하기도 하고 참여 주민이 지인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모집을 나서기도 한다.

③ 참여자 기본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돕는다. 참여자간 친밀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분과 구성 및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

④ 마을계획단 설립식

참여자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의사소통을 전문촉진자가 지원하며 마을계획단의 조직체계와 운영규약 등을 논의한다. 설립식에서는 대표를 선출한다.

⑤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관심사, 욕구가 비슷한 주민들끼리 팀을 구성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동네 한바퀴(field survey)를 진행한다. 조사항목과 방법 등도 주민 토의로 결정하며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한다.

⑥ 마을계획 수립

마을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하고 의제 발굴 결과에 따라 분과를 구성한다. 분과별로 의제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며 의제 실행 방법과 예산 등을 구체화하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2016년부터 시범 실시한 금천구 독산4동은 동장실을 주민 공론화 공간으로 바꿔 쓰레기와 주차 등 마을의 문제를 주민총회를 열어 의제화하고, 이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사업으로 풀어내 지역혁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된다.

며 마을계획단 전체가 미래상을 설정하는 단계다.

⑦ 마을총회 개최

그동안 발굴된 마을의제를 인터넷과 현장투표 등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본투표를 통해 마을사업을 확정하는 단계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마을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의 백미로 불린다.

서울시 찾동사업을 통해 발굴된 마을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생활/안전, 인프라/미화, 소통/미디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8개 대주제, 14개 소주제, 158개 의제, 235개 실행계획으로 분류해 밀착된 생활의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거쳐 해결한 생활문제 사업이 43.9% 증가했다.

구분	소주제(14)	해당 내용 및 분과명
생활/안전	생활	주차, 쓰레기, 악취, 흡연
	안전	놀이터, 보행안전(통학로), 치안, 방재
건강/복지	건강	노인건강, 스포츠
	복지	복지, 자원봉사, 사각지대 발굴
문화/역사	문화(예술)	문화, 예술, 축제, 역사
교육/돌봄	교육	교육, 청소년
	육아	보육, 아동
공유/경제	공유	공유, 자원재활용, 벼룩시장
	경제	지역경제, 수익창출
자연/생태	생태	환경보호, 생태학습
소통/미디어	소통(공간)	세대/가족 통합, 갈등해소, 이웃교류, 다문화, 소통공간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라디오
인프라/미화	환경미화	벽화, 화단 조성 및 식재, 가로 및 천변 정비
	도시인프라	대중교통 체계, 정류장 개선, 공공 및 편의시설 신축

8) 마을계획,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2017),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안현찬-구아영

서울시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마을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 사적인 공동체 활동과 공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연결하는 제도적 체계와 내용 마련
- 참여자의 양적/질적 확대, 참여와 합의의 내실화, 지역사회 변화 등 성과 확인

- 성공 요인은 주민들의 자기조직화, 권한과 자원제공, 주민이 수립 가능한 계획 수준 등으로 판단
-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도시재생 등 다른 주민참여형 정책과의 연계 기대

3 주민참여를 위한 기제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리빙랩

촛불항쟁 이후 시민참여의 강화는 행정영역 전반에서 핵심화두로 떠올랐다. 민선7기 지방정부는 공통적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혁신시정”“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 등을 기치로 주민참여와 민관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방정부 누리집에 ‘참여와 소통’ 섹션을 비중 있게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시민제안, 청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온라인 공론장을 통한 시민 의견의 정책반영은 여전히 요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을 감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지만 시민이 없는 시민참여와 소통 없는 플랫폼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⁹⁾

시민참여 플랫폼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시민이 다른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을 경청하고 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소통 플랫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다수 지자체 플랫폼은 시민 상호간 숙의의 통로를 마련해두지 않은 채, 제안자와 담당부처 공무원 간의 1:1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시민들의 제안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명한 시민의 집단지성은 충분한 정보의 공유와 치열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시민-지자체 특정 부서간의 1:1 소통만이 아니라 시민-시민간, 공공기관내 다양한 유관부서간 논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행정적 실행과 정책 반영”이라는 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민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면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심의와 채택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지는지 투명하고 명료한 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과 처리의 공정성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이슈화를 위한 공유가 용이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행동을 확장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발달과 인터넷기술의 진보가 공유모델에서 협력모델로 변화를 쉽게

9)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2017), 국민참여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이진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정부 영역과 시민영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합의와 타협이 가능한 공론장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협력모델에서는 정부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협력모델까지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여전히 제공자와 사용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생모델에서는 서로가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할 때도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다차원적인 문제에 다양한 채널로 반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 가능해진다.

상생모델에서는 시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 영역에서만 담당하고 있던 공공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만든 플랫폼에서 시민들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는 변화가 보일 것이다. 정부영역과 시민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느 한쪽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소통의지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과정에 잘 드러난다. 광주광역시 '바로소통 광주행복1번가'와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은 주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참여예산과 결합한 문제해결 방식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시민의 정책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구해야 할 비전이자 과제가 될 것이다.¹⁰⁾

그동안 정부는 정책 변화의 주체였고 시민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대중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대상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은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다중'으로 성장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체제유지를 위한 안정성을 추구하며 주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정부의 실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시민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시민영역은 생활유지를 중심으로 재미와 감동을 통해서 연대를 이뤄낸다면 정부영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제도와 규칙을 토대로 행정서비스를 한다. 시민들은 자율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반해서 정부는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공공성을 수행하며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상반된 구조에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정부영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민원처리에서 정책제안까지 가능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시민들을 불러 모았고, 소수의 시민만이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10) 플랫폼이란 무엇인가?(2012), 한빛비즈, 윤상진

대상이 되었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라고 쓰고 웹사이트 혹은 행정서비스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커지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시민영역과 정부영역의 엇박자의 원인을 이해하고 기술적으로만 완결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3-1 온라인 주민참여 과정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즐겨찾고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속의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접근경로¹¹⁾를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다. 첫번째는 '발견'의 단계다. 해결하고 싶은 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플랫폼을 탐색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플랫폼 탐색에 드는 물리적 장벽(시간, 에너지) 등을 낮춰 사용자가 플랫폼을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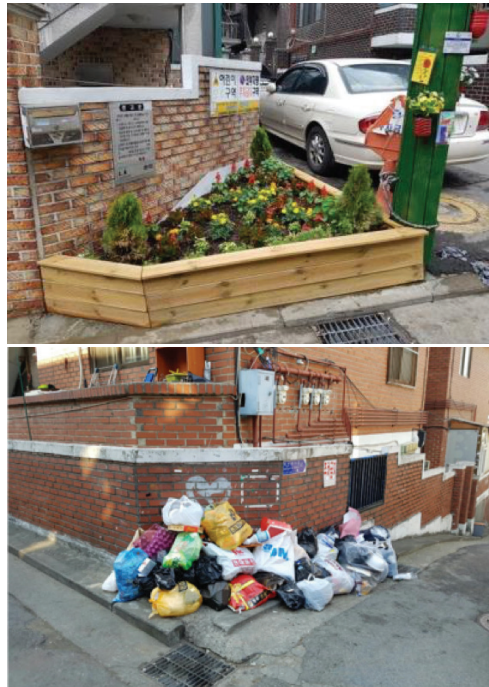
두번째 '선택'의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들은 개방성, 보안성, 시민친화적 디자인, 투명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려되는 요인들이다.

세번째 '경험'의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인식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인들로 속의성, 효능감, 사회적효과, 시민연대가 있다. 경험 단계에서 충족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네 번째 '공유'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외부에 다양한 형태로 알리고자 하는데, 이때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지표가 '확산성'이다. 얼마나 확산이 잘 일어나는가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플랫폼에서 축적했는가와 연관성을 가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30여년의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것은-형식적인 절차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실질적으로 정치로 대변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강력한 대의 민주주의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완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도는 언제나 지속되어 온 것이다.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개발한 시민기술도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1) 오가닉마케팅(2017), 윤지영

더 나은 온라인 참여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 구현되려면 그것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협의 민주주의든, 시민과 정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이든 온라인 참여서비스의 최후의 수혜자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되어야 한다.



소셜리빙랩은 골목길 쓰레기 문제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정확한 문제정의 아래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무단 쓰레기 투기 현장이 주민참여를 통해 골목길 화단으로 바뀌면서 골목길 풍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3-2 소셜리빙랩을 통한 주민참여

최근 사회혁신 방법으로써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리빙랩은 ‘생활실험실’이라고 해석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다.¹²⁾ 유럽에서는 이미 2006년 20여개의 리빙랩들이 모여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리빙랩 실험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리빙랩은 낯선 단어다. 그 이유는 리빙랩의 특징인 시민참여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빙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셜리빙랩’은 기존 리빙랩의 성격을 보다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하여 수용성을 바탕으로 편의를 개선한 리빙랩과는 다르게 소셜리빙랩은 각종 사회문제를 ‘시민참여’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시민’은 당사자이고 문제해결의 주체다. 소셜리빙랩에서 ‘시민’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인 주체로서 해법을 모색하고 문제해결 실험 과정에 참여해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무엇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회적가치’를 중요한 결과로 설정하

며, 지역사회의 자원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별점을 갖는다. 이렇게 소셜리빙랩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약하면 소셜리빙랩이란 ‘①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들이 ②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③지역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④사회적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⑤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3 소셜리빙랩의 특징

소셜리빙랩의 주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 이들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당사자로 참여한다. 단순히 진행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방법도 남다르다. 리빙랩의 가장 큰 장점인 서로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 소셜리빙랩에서는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한다. 모두가 함께 새로운 과정과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형태가 된다.

리빙랩을 통해 우리 동네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결과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쓰레기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장할 수도 있으며, 교육 소외 지역의 경우 지역 관계망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각각의 실험들이 모여 사회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며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소셜리빙랩 특징>

- ① 당사자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시민들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
- ②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을 기초로 창조적인 과정으로 문제해결
- ③ 지역사회 자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제해결
- ④ 사회적가치¹³⁾를 높이는 진행과정 및 결과
- ⑤ 능동적 참여: 혜택의 수혜자로서 참여가 아닌 적극적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

3-4 소셜리빙랩 실행 체계

(1) 참여주체: 시민, NGO, 공공, 민간, 학계

소셜리빙랩은 시민, NGO, 공공, 민간, 학계가 공동주체가 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 시민들은 앞에서 언급했듯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주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동창안에 참여한다.
- NGO(시민사회)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사회의제와 연결시켜 생각과 논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 공공은 소셜리빙랩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협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¹²⁾ 리빙랩이란 무엇인가, 윤찬영 (2018)

¹³⁾ 혁신이 진정으로 사회적이라면 그것의 균형이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가치로 기울어져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가치란 공공 또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Phills Jr J R, Deiglmeier K & Miller D T,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 민간은 소셜리빙랩 진행과정에 시제품을 만들고 결과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제공한다.
- 학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데 자문을 한다. 또한, 진행 결과를 연구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2)지역기반 문제해결

소셜리빙랩은 지역혁신가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우선, 지역 내 혁신가(자원)를 발굴하고 혁신가들과 주민들을 연결한다. 또한 각 영역의 혁신가들이 교류할 수 있게 한다.

지역혁신가 그룹은 청년,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과학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사회복지사, 인문·철학자, IT기술자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가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소셜리빙랩 진행과정 단계에 맞춰 참여주체들을 지원하며, 지역 내에서 서로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3-5 소셜리빙랩 실행하기

소셜리빙랩은 리빙랩과 같이 공동창조 워크숍(Co-creative workshop)을 통해 진행된다. 공동창조 워크숍은 크게 공동분석(Co-analysis), 공동디자인(Co-design), 공동평가(Co-evaluation), 공동실행(Co-Implementation)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시민이 처음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에서부터 설계-실행-피드백을 거치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외부로 확장하는 과정까지를 크게 실험준비, 소셜리빙랩 설계 및 실행, 평가 및 유지, 확장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각 단계들은 참여주체들이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스텝 1) 실험준비 Co-analysis

가장 먼저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소셜리빙랩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함께 집을 지을 사람을 모으고, 집이 세워질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분석하고 조성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주체 구성

그 첫 번째는 함께 집을 지을 사람, 참여주체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처음 문제의식을 갖고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고자 하는 시민과 함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실행체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중간지원기관 및 NGO를 연결하고 공무원, 대학, 관련 기업 등을 핵심운

영 주체로 모은다. 이 다섯 단위가 모두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주제와 상황에 맞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최소 단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② 혁신가 그룹 구성

핵심운영 주체가 구성되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혁신가 그룹으로 구성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에서부터 건축공학까지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혁신가 그룹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리빙랩 과정에 참여한다. 혁신가 그룹은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과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구성한다. 혁신가 그룹 구성은 소셜리빙랩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도출 및 지역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험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에 접해보지 않았던 철학자 및 심리학자와 같은 인문학자들과 IT전문가 및 과학자들도 같이 구성해 이종 간 결합이 가능하도록 풀을 구성하는 것도 공동창조 과정에 도움을 준다. 이종 간 결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것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신뢰형성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그룹이 구성되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소셜리빙랩을 운영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형성이다.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각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소셜리빙랩에 참여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능력을 공유하면 문제 현황 및 내·외부 환경을 더욱 빠르게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다. 문제 제기, 해결방법 모색, 실행, 평가 등 단계별로 목적과 목표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소셜리빙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협치’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한편, 실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텝 2) 소셜리빙랩 설계 및 실행

소셜리빙랩을 운영할 주체 및 함께 논의할 혁신가 그룹을 구성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했다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집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설계도는 어떤 목적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① 전략세우기

소셜리빙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을 세울 때는 앞서 공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비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셜리빙랩을 선불리 시작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비전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시도되어도 이후 서로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해결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다르므로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비전이 세워졌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전략은 비전 및 목적에 따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 맞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나눈다. 마음껏 나눈다는 것은 참여하는 주체가 각각 평소에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괜찮고, 지역 혁신지원 그룹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도 좋다.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기존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다양한 영역의 혁신지원단이 함께 같은 목표를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 이후 아이디어들이 실제 실행되었을 때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막연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놓치고 있었던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비전에 적합하며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일부를 선정해 시나리오 작업을 반복하며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시나리오 점검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되었다면 실행계획을 함께 작성하며 전략을 구상할 차례다.

② 공동 디자인

공동디자인(Co-design)은 실제 소셜리빙랩 참여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전략 세우기부터 실제 집행할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험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더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정리해본다. 부족한 자원을 동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내용을 보완한다. 실제 실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이 수립된다. 해결 방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

③ 파일럿 실행

구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를 실행해본다. 이 실행과정은 실제 집행하기 전의 임시 집행으로 바로 실행했을 때의 위험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이라면 파일럿으로 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그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고, 시제품이라면 실제 모양과 같은 제품을 그대로 구현해 활용한다. 정책이라면 행정과 상의해 한시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 및 이후 만족도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 파일럿 실행은 실제 소셜리빙랩의 중요 전환점으로 기존에 논의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실제로 진행해 봄으로써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는 소셜리빙랩의 가장 큰 장점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를 반복하여,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인다.

스텝 3) 평가 및 유지

파일럿 실행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면 실행 전반의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으로 세운 비전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는지, 처음 전략을 세웠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이 잘 지어졌는지, 시공검사를 하는 것과 같다.

① 공동평가&피드백

소셜리빙랩은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 다면적 관계망 속에서 기존 방법과 다른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고 모델화해 시행해본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주체 간 관계 혹은 공동체 유대감의 발전, 주체간 의사소통, 운영의 민주시정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소셜리빙랩 준비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험 진행과정의 평가는 상시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점검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는 실험인 만큼 시민 참여형 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평가들과의 차별성은 ‘시민의 주도성’과 생활세계의 ‘현장성’이고 이를 반영해 소셜리빙랩 실행 단계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피드백

공동으로 소셜리빙랩 전반의 과정을 평가해 돌아봤다면, 그 내용을 다시 실행 중인 실험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이는 일회적이어서는 안되며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소셜리빙랩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시민의 주도성’이지만 시민들이 전문가처

럼 바로 답을 주기 어렵다. 그래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피드백을 해나가다 보면 실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스텝 4) 확장

앞선 과정들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문제 원인 중 일부분에 대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본 것이라면 확장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적용해 그 효과를 사회적으로 넓혀가는 단계이다. 우리 집에서 해보니 좋았던 것을 옆집에도 알려줘 동네가 좋아지게 하고 동네에서 좋았던 것을 옆 동네에 전달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① 정의 및 적용

다른 지역으로 사례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각각의 지역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성공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성공사례가 실행되었던 지역과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의 SWOT분석을 제대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적용하려고 하는 지역과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을 바탕으로 2~3곳의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 비교해본다. 각 지역 특징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본다.

협업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진행된 소셜리빙랩 실험의 정보들을 제3자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핵심사항들을 전달한다.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며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과 연결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준다.

② 경청 및 학습

지역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타지역 사례에 대해 경청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진행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듣고 현재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연습사례가 되어 주며,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각종 제약사항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사례공유 및 협업

이렇게 학습이 끝나 적용해 실행했다면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소셜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시도한 것으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곤 한다. 이에 사례 및 방법에 대한 공유가 한정적이다. 새로운 실험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그 결과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사례가 공유되면 각각 사례의 유의미한 점들을 바탕으로 실험과 실험, 지역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합동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

*에치오 만치니(Ezio Manzini)¹⁴⁾: 리빙랩을 리빙랩답게 만드는 특징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최종 사용자가 포함돼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이다. 그런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개인과 공동체, 행정기관과 기업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존재 방식 및 행동 방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사회기술적 실험이 진행되는 하나의 거대한 연구실로 여겨야 한다. 미래에는 이런 실험적 접근이 ‘일상적’ 방식이 될 것이다.

III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변화의 사례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은 옛날식 골목을 따라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다.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고, 요일을 정해 이를 수거해 가지만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다보니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집집마다 대문 앞에 내놓는 쓰레기들이 골목길을 어지럽히면서 동네의 오랜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산4동 주민센터는 주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계획단에서 마을총회를 기획하고, 그 자리에서 골목길 쓰레기 문제해결을 마을사업 중 하나로 결정했다. 이후 주민들은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동네 곳곳에 60여개의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었다. 이전까지 각자 대문 앞에 내놓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처럼 분리수거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도시광부로 고용했다. 도시광부들은 주민들에게

13) “디자인 능력, 모든 이에게
절실히 질 것”(2016. 10. 17)
오마이뉴스, 윤찬영

재활용 수거를 홍보하고, 안내하며, 재활용정거장 내 분리수거를 마무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 동네 골목길 곳곳에 화분을 놓고 화단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을 예방하는 우리 마을 깔끔이도 발족하였다. 이 역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었다.

그 결과 골목길은 쓰레기 대신 화사한 화분으로 가꾸어졌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2년 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함께 골목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교류도 늘어나고, 동네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다. 주민들은 ‘2023독산행복골목위원회’를 결성하여 골목길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정거장, 도시광부, 화단가꾸기 등은 모두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특별한 사업도 아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도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재활용정거장은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었다.

독산4동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민들의 참여다. 동주민센터가 재활용정거장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는데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도시광부로, 우리 동네 깔끔이로 참여하면서 책임감도 갖고 또 이웃들의 참여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점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또한 그보다 앞서 마을총회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 나선 것 자체가 성공요인이다.

전라북도 정읍 송죽마을 공동체도 좋은 사례다. 33가구 주민 70명이 ‘솔티마을공동체(유연필 대표)’¹⁵⁾를 구성해 모시를 생산하고 가공·판매하는 지역순환 경제체계를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모시 작목반이 모시잎을 생산하면 마을기업이¹⁶⁾ 모시잎 전량을 구매해 세척후 가공하고 이를 다시 마을 안에 위치한 떡집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떡집은 모시 원료를 활용해 떡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송죽마을 사람들은 마을사업을 통한 매출액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2014년 1월부터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국영목장인 ‘갑마장’이 위치하여 왕에게 진상 등 목축업이 성행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쇠락하여 1933년 마을목장 육성시책에 따라 마을소유가 되고 마을목장(약 210만평)은 가리협업목장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마을의 역사적 특성을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조합에서 공동목장 일부에 말과 관련된 국내 최초 리립 조랑말박물관, 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고 지역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직접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한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주민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가시리 마을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사업공모, 수익구조 논의, 수익배분 과정을 주



제주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에 있는 조랑말박물관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리립 박물관이다.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운영하고 수익금은 마을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전기료 등 공과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 스스로 결정하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수익금(약 12억원)은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대신 전기요금과 시청료로 매달 3만원씩 마을 555가구에 지급하고 마을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입학 및 졸업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 여기산 마을공동체 ‘웅심이’의 사례도 재미있다. 주민센터와 경기도 따복공동체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내 32가정이 건축폐기물 등 무단투기 장소를 텃밭과 온실(커뮤니티 공간)로 조성해 100여톤에 달하는 건축폐기물을 수거해 마을 공동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컨테이너 온실을 마련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농업교육과 유기농 먹거리 교

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텃밭은 개인별로 분할하여 공동경작을 권장하고 수확물을 활용한 자선행사도 주최한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경작과 모임을 통한 소통에 나서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선행사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변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리빙랩 실험도 주목할 만하다. 대전 유성구 갑천의 빈번한 범람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현안으로 떠오르자 학생, 주부, 메이커, 디자이너 등 다양한 행위자가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방지 정보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사고방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무선 IP카메라를 장착해 반응형 모바일 웹을 통한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스마트폰으로 대전 유성구 갑천 징검다리 범람과 안전상태를 실시간 확인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변화는 주민의 단순한 참여나 동원이 아닌 주민에게 권한을 주고 주민의 독창성을 이용해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실행으로까지 연결시킬 때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일어난다. 시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희망제작소(2018), 희망드로잉 26+, 희망제작소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 최종 결과보고서(2018), 희망제작소
지역사회와 사회혁신 거버넌스 구축-대구와 강원 지역혁신포럼을 중심으로-(2018),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¹³⁾ ‘솔티’는 송죽마을의 옛 지명으로 전통적으로 모시 잎을 주로 생산해 왔다.
¹⁴⁾ 내장산쑥모시 영농조합은 ‘13~14년 행안부지원 마을기업을 설립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시민없는 시민참여 소통없는 플랫폼(2018), 전국 지자체 시민제안 서비스 종합평가, 와글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빌리지’(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SMART CITY by SMART CITIZEN(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II (201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회혁신(2017), 서울연구원, 김병권 외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2016), 과학기술연구, 성지은 외
서울형 거버넌스 모델 구축방안(2016), 서울연구원, 정병순 외

ISSUE BRIEF 2018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vol.6
평생학습 × 파트너

ISSUE BRIEF 2018 - vol. 6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발행일 2018년 9월
디자인 그래픽 피엘에프(GRAFIK P.L-F)

주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팩스 02-6730-7166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ISSUE BRIEF 2018

vol.6